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p. 2019

Vol. 33

9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재정칼럼

툰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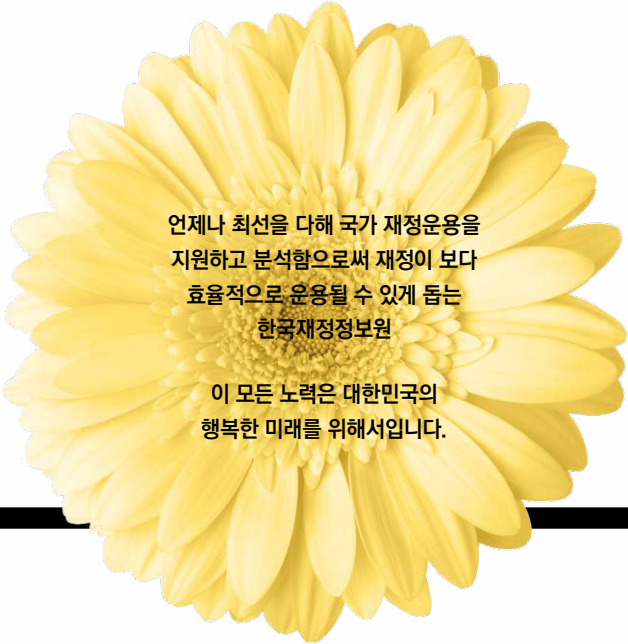
재정 Talk Talk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언제나 최선을 다해 국가 재정운용을
지원하고 분석함으로써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돕는
한국재정정보원

이 모든 노력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미래 디자이너’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재정
INSIGHT

04 KPFIS 인사이트

- ① 「2020년 예산안」 주요내용
박정수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② 국고보조금 예탁관리 현황
김상훈 e나라도움운영본부 과장
조승현 e나라도움운영본부 사원

20 재정칼럼

- ①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배정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② 예산과 재정의 국민 참여에 관한 단상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28 톺아보기

국민참여예산

재정
NOW

30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① 최근 재정통계
- ② 분야별 통계 : 농림·수산 분야

42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 수출규제

46 해외재정동향

IMF 수정 세계경제전망 :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Update, July 2019」

재정
STORY

52 이달의 재정 이야기

청년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청년 희망사다리'

56 재정 Talk Talk

정부의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되나요?

58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기사가 아니라 돈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다

62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경제시스템 붕괴가 가져오는 파장

66 KPFIS의 서재

68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활용부 | 02-6908-8583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01
KPFIS-인사이드

「2020년 예산안」 주요내용

박정수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mymajesty@kpfis.kr)

정부는 8월 29일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을 위한 「2020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0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2019년 본예산 대비 9.3% 증가한 513.5조 원으로,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 본고에서는 2020년 경제·재정 여건과 수입·지출 계획,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과 중점투자방향, 재정혁신방향 등을 살펴본다.



01

● 2020년 경제여건과 재정운용방향

정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19년 2.4~2.5%, 2020년 2.6%로 전망했다. 2019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경제 활력 저하로 인해 하반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여건은 적극적 일자리 정책,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로 취업자 수가 연초 전망보다 증가하는 등 개선되고 있으나, 투자 부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다. 대외 여건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조정과 세계 교역 둔화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

표 1. 2019~2020년 경제전망

	2017 실적	2018 실적	2019		2020 전망
			당초	수정	
경제성장률(실질GDP, %)	3.1	2.7	2.6~2.7	2.4~2.5	2.6
취업자 증감(만 명)	31.6	9.7	15.0	20.0	20.0
고용률(%)	66.6	66.6	66.8	66.8	67.0
경상수지(억 달러)	752.0	764.0	640.0	605.0	635.0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2018.12.17.
기획재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19.7.3.

2020년 이후에는 세계경제 회복¹, 정부의 적극적 정책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회복,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는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한일 관계 등의 대외 불확실성 요인, 생산가능인구 감소², 소비패턴 변화³ 등 성장세를 제약하는 위험요인도 상존할 것이다.

정부는 대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고, 투자·소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방향으로 ①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하고, ②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병행하며, ③ 재정운용·관리 과정에서 혁신성과 포용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했다.

1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18년 2.9%, 2019년 2.6%, 2020년 3.5%이다.

2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를 말한다.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의하면 생산가능 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5년까지 3,585만 명,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주된 소비패턴 변화는 소매 판매 중 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2015년 10.5%→2018년 18.2%)이다. 이와 대비되어 오프라인 영세 자영업자 과당경쟁으로 체감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

02

재정수입

2020년도 재정수입은 총지출 기준 482.0조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조 원(1.2%) 증가했다. 소득세는 전년도보다 8.0조 원(10.0%) 증가한 88.4조 원이다. 법인세는 전년도보다 14.8조 원(18.7%) 감소한 64.4조 원이며, 부가가치세는 0.1조 원 증가할 전망이다⁴.

2021년 이후에는 세계경제 회복, 혁신성장 정책 노력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외수입은 2018년 본예산 대비 1.2조 원(4.5%) 증가한 27.8조 원이며, 벌금 등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입 여건은 유동적이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 지속으로 인해⁵ 전년도보다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은 2019년 대비 0.4%p 낮아진 19.2%, 국민부담률은 0.1%p 낮아진 26.7%로 전망된다.

표 2. 2020년 재정수입

(단위: 조 원, %)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2019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액(B-A)	증감율((B-A)/A)
총수입	465.3	476.1	476.4	482.0	5.9	1.2
국세수입	293.6	294.8	294.8	292.0	-2.8	-0.9
소득세	84.5	80.4	80.4	88.4	8.0	10.0
법인세	70.9	79.3	79.3	64.4	-14.8	-18.7
부가가치세	70.0	68.8	68.8	68.9	0.1	0.2
세외수입	26.0	26.6	27.0	27.8	1.2	4.5
기금수입	145.1	154.7	154.7	162.1	7.4	4.8
조세부담률(%)	21.2	19.6	-	19.2	-	-
국민부담률(%)	26.8	26.8	-	26.7	-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9.9.10.

기획재정부,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⁴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으로 인한 지방 이전분은 5.1조 원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다. 2010년 최초 도입 시에는 5%였으며, 2018년 11%, 2019년 15%로 각각 인상되었다. 2020년에는 21%로 인상할 계획이다.

⁵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6개 사회보험성기금은 결산기준으로 2007~2018년간 연평균 5.2%, 2014~2018년 연평균 6.6% 증가했다. 이 추세는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03

● 재정지출

정부는 2020년 재정을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20년도 예산안의 증액분은 43.9조 원에 달하며, 증가율은 9.3%로 전년도(2018년도 본예산 대비 2019년 본예산 증가율 9.5%)와 유사한 수준이다⁶.

의무지출은 2019년 본예산보다 16.3조 원(6.8%) 증액된 255.6조 원을 편성하였다. 의무지출 증액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7.9조 원→9.0조 원), 기초연금 급여인상으로 인한 증액(11.4조 원→13.2조 원), 의료급여 확대(6.4조 원→7.0조 원) 등 복지지출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27.5조 원(11.9%) 증액된 257.8조 원을 편성하였다. 재량지출 증액은 산업지원(R&D, 수출입·창업 용자지원) 확대, 안전·생활·균형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무지출 비중은 2019년 본예산보다 1.2%p 낮아진 49.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2020년 재정지출

(단위: 조 원, %)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C)	2019년 본예산 대비		2019년 추경 대비	
		본예산(A)	추경(B)		증액 (C-A)	증가율 ((C-A)/A)	증액 (C-B)	증가율 ((C-B)/B)
총지출	434.1	469.6	475.4	513.5	43.9	9.3	38.1	8.0
의무지출	215.1 (49.6)	239.3 (51.0)	239.8 (50.4)	255.6 (49.8)	16.3	6.8	15.8	6.6
재량지출	212.4 (49.6)	230.3 (49.0)	235.6 (49.6)	257.8 (50.2)	27.5	11.9	22.2	9.4
세출 외 ¹⁾	6.6	-		-	-	-		

주 1) 자치단체교부금 정산 등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9.9.10.

기획재정부,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12대 분야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보건·복지·노동 분야(20.6조 원, 12.8%)이다. 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지출, 일자리 관련 노동지출이 확대되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SOC 분야, 환경 분야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조 원(27.1%), SOC

⁶ 2019년도 추경(475.4조 원) 대비 2020년 본예산 증가율은 8.0%이다.

분야는 전년 대비 2.6조 원(12.5%), 환경 분야는 1.4조 원(19.3%) 증액하였다. 전년도 추경 대비로는 각각 3.3조 원(16.0%), 1.8조 원(8.8%), 0.2조 원(2.3%) 증액이다.

R&D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조 원(17.3%) 증액하였다. 주로 핵심 부품개발 기술을 위한 사업이 확충되었다.

반면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지출증가율이 2.6%, 5.1%로 낮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교부세⁷는, 국세 수입전망이 전년 대비 낮아짐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대비 0.2조 원(0.3%) 감소할 전망이다.

표 4. 12대 분야 자원배분 변화

(단위: 조 원, %)

	2019		2020	2019년 본예산 대비		2019년 추경 대비	
	본예산 (A)	추경 (B)	예산안 (C)	증감액 (C-A)	증감율 ((C-A)/A)	증감액 (C-B)	증감율 ((C-B)/B)
총지출	469.6	475.4	513.5	43.9	9.3	37.1	8.0
보건·복지·노동	161.0	163.2	181.6	20.6	12.8	18.4	11.3
교육	70.6	70.8	72.5	1.8	2.6	1.7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2	55.2	55.5	0.2	0.4	0.3	0.5
문화·체육·관광	7.2	7.3	8.0	0.7	9.9	0.7	9.6
환경	7.4	8.6	8.8	1.4	19.3	0.2	2.3
R&D	20.5	20.6	24.1	3.6	17.3	3.5	17.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0.6	23.9	5.2	27.5	3.3	16.0
SOC	19.8	20.5	22.3	2.6	12.9	1.8	8.8
농림수산식품	20.0	20.3	21.0	0.9	4.7	0.7	3.4
국방	46.7	46.7	50.2	3.5	7.4	3.5	7.5
외교통일	5.1	5.1	5.5	0.5	9.2	0.4	7.8
공공질서·안전	20.1	20.2	20.9	0.8	4.0	0.7	3.5
일반·공공행정	76.6	76.7	80.5	3.9	5.1	3.8	5.0
*지방교부세	52.5	52.5	52.3	-0.2	-0.3	-0.2	-0.4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9.9.10.

기획재정부,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⁷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46%를 법정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내국세는 국세에서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특별회계 세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04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인해, 단기적으로 재정수지는 악화된다. 2020년 재정수지 전망은 통합재정 기준 31.5조 원 적자, 관리재정 기준 72.1조 원 적자이다. GDP 대비 비중은 통합재정수지 -1.6%, 관리재정수지 -3.6%로, 2019년도 추경 기준보다 각각 -1.6%p, -1.4%p 악화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에 따라 국가채무 역시 확대된다. 2020년 국가채무 규모는 805.5조 원으로 2019년 추경 대비 74.0조 원 증가하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39.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단기적 악화는 중기적으로 적극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를 2023년까지 3% 후반 수준, 국가채무를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3년까지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 후반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증가할 전망이다.

표 5.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 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결산	본예산	추경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	465.3	476.1	476.4	482.0	505.6	529.2	554.5
총지출	434.1	469.6	475.4	513.5	546.8	575.3	604.0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1.2 (1.6)	6.5 (0.3)	1.0 (0.0)	-31.5 (-1.6)	-41.3 (-2.0)	-46.1 (-2.1)	-49.6 (-2.2)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10.6 (-0.6)	-37.6 (-1.9)	-42.3 (-2.2)	-72.1 (-3.6)	-81.8 (-3.9)	-85.6 (-3.9)	-90.2 (-3.9)
국가채무 (GDP 대비)	680.7 (36.0)	740.8 (37.1)	731.5 (37.2)	805.5 (39.8)	887.6 (42.1)	970.6 (44.2)	1,061.3 (46.4)

주: GDP 신계열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9.9.10.

기획재정부,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05

● 「2020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

2020년 재정부운용의 방향은 크게 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 확대, ②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③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한 사회투자, ④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⑤ 튼튼한 국방·외교 등 다섯 가지이다.

① 혁신성장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신성장 분야(D.N.A.+BIG 3) 투자 확대, 관련 인력 양성과 벤처·창업 확산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이 0.8조 원 규모에서 2.1조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된다.

표 6. 혁신성장 투자의 주요 사업 내용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주요 사업 내용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 안정	0.8조 원	2.1조 원	· 반도체 등 핵심품목 기술개발지원(1.3조 원) · 제품 상용화 지원(0.5조 원) · 설비확충, 해외기술 도입위한 자금지원(0.4조 원)
D.N.A + BIG 3 집중지원	3.2조 원	4.7조 원	· D.N.A(Data, Network, AI) 기술개발, 시장형성, 융복합 투자 확대 가속화(1.7조 원) · 3대 핵심사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3.0조 원)
혁신선도 미래인재 양성	0.4조 원	0.6조 원	· 4차 산업분야 4.8만 명 혁신선도 미래인재 양성
대학교육 혁신투자 확대	10.6조 원	11.5조 원	· 대학혁신지원(0.7조 원) · 산학협력고도화(0.4조 원)
제2벤처붐 확산	3.7조 원	5.5조 원	· 모태펀드 출자(1.0조 원) · 혁신모험펀드(0.3조 원), 창업사업화지원(0.4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9.9.10.

기획재정부,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② 경제활력 제고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투자 부진,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고용 여건 불확실성에 따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수출·투자·관광 활성화,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이 중점으로 추진된다.

표 7. 경제활력 제고 투자의 주요 사업 내용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주요 사업 내용
수출·투자관광 활성화	5.5조 원	7.8조 원	·수출지원 확대(수출입은행 출자 등 0.8조 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출연, 용자를 통한 정책자금공급 확대(6.8조 원) ·한류 기반 국내관광 활성화(0.1조 원)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0.9조 원	1.3조 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 등 지원 확대(0.8조 원) ·지방·외국인투자 촉진 확대(0.3조 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9.5조 원	14.9조 원	·문화·체육시설, 돌봄인프라 등 생활SOC 투자 확대(10.3조 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착수(0.5조 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2.2조 원), 농업생산기반정비(1.9조 원), 어촌뉴딜300(0.4조 원) 등
일자리 지원	21.2조 원	25.8조 원	·직접일자리 2.9조 원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0.3조 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20→29만 명) ·구직급여 확대(7.2→9.5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9.9.10.

기획재정부,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③ 국민생활 편의·안전증진

노후 SOC 시설, 미세먼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스마트 인프라 확충, 재난 안전 인프라 투자, 미세먼지 저감 투자, 폐기물 및 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표 8. 국민생활 편의·안전증진 투자 확대 주요 사업 내용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주요 사업 내용
스마트 인프라 확충	0.3조 원	1.2조 원	·교통, 상수도 등 시설에 AI 등 신기술 접목하여 도시문제 해결 및 효율적 도시환경 구현 ·스마트 상수도(0.4조 원), 첨단 교통체계 구축(0.4조 원), 스마트시티 등 미래도시환경 구현(0.3조 원)
재난 안전 인프라 투자	2.9조 원	3.6조 원	·노후 SOC 개보수(1.3조 원) ·재해위험지역 등 정비(0.5조 원)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교통안전, 산재방지, 자살예방) 추진
미세먼지 저감 투자	2.3조 원	4.0조 원	·저감조치(3.7조 원), 국민건강보호(0.2조 원), 국제협력 등 정책기반 강화(0.2조 원)
국민건강 증진 및 위해 요인 제거를 위한 투자 확대	8.3조 원	9.4조 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확대(7.9조 원→9.0조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0.1)조 원, 청정바다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9.9.10.

기획재정부,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④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출산에서 고령에 이르는 생애주기 지원, 소득·전달체계 별 지출, 자영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 지원 확대, 노인소득기반 확충 및 고령화 대응, 자영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표 9.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주요 사업 내용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주요 사업 내용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	6.6조 원	7.3조 원	·교육급여 부교재비 인상(20.9→30.9만 원)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중위소득 44→45%)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취약계층 지원 강화	1.1조 원	1.4조 원	·장애인활동지원 강화(서비스시간 110→127시간) ·발달장애인지원 확대(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2,500→4,000명 등) ·보호아동 자립수당 지급인원 확대(0.5→0.8만 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 지원 확대	4.2조 원	4.7조 원	·영유아 보육료 확대(3.7조 원)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0.7조 원) 등
노인소득기반 확충 및 고령화 대응	13.3조 원	15.6조 원	·기초연금 급여인상(하위 20→40%, 25→30만 원) ·노인일자리 확대(61→74만 명)
자영업 및 소상공인 육성	2.4조 원	2.8조 원	·소상공인 융자 확대(1.9→2.3조 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확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신규사업 146억 원 등)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9.9.10.

기획재정부,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

⑤ 튼튼한 국방·외교

안보위협 및 주변국 첨단무기투자 확대 등 대외 관계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방 분야 3.5조 원(전년대비 7.4%) 증액, 외교·통일 분야 0.5조 원(전년대비 9.2%) 증액이 이루어진다. 국방비는 50.2조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위비 개선비 비중이 32.9%에서 33.3%로 확대된다. 사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54.1만 원으로 33% 인상하는 등 장병 기본 복지 역시 대폭 향상된다.

남북 경협,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위한 예산사업도 확대된다. 경협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9년 4,289억 원에서 2020년 4,890억 원(전년 대비 14.0%)으로 증액된다. ODA 사업은 신남방 전략투자(0.6→0.8조 원) 중심으로 확대되고, 융합 ODA 프로젝트 예산사업은 50개 1,875억 원 규모에서 70개 2,733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8. 지방소비세율은 2018년 11%,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된다.

06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혁신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혁신을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미흡·연례적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출을 재정여건 변화에 맞추어 혁신하며, 세입기반 강화를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둘째, 재정관리의 혁신성도 제고한다. 계약·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혁신 기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등 혁신지향적으로 공공조달을 관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추진해 재정정보관리를 고도화하고, 국민이 한 곳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정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정보 공개 플랫폼으로 개선한다.

세번째 혁신방향은 재정운용의 포용성 강화이다. 지방소비세 이양 확대⁸ 등 재정분권이 추진되고, 재원이양과 연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 3.6조 원 규모의 지역 밀착형 사업이 지방에 이양된다. 그리고 국민참여예산 계속사업 28개 1,580억 원, 신규사업 1,114억 원이 반영되고,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접수기간 상시화, 참여 방법과 폭이 확대 추진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도권·비수도권 평가 이원화 등 지역 균형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개편된다.



02

KPFIS-인사이드

국고보조금 예탁관리 현황

김상훈 e나라도움운영본부 과장(shkim@kpfis.kr)

조승현 e나라도움운영본부 사원(cho2017@kpfis.kr)

01

● 예탁관리는 왜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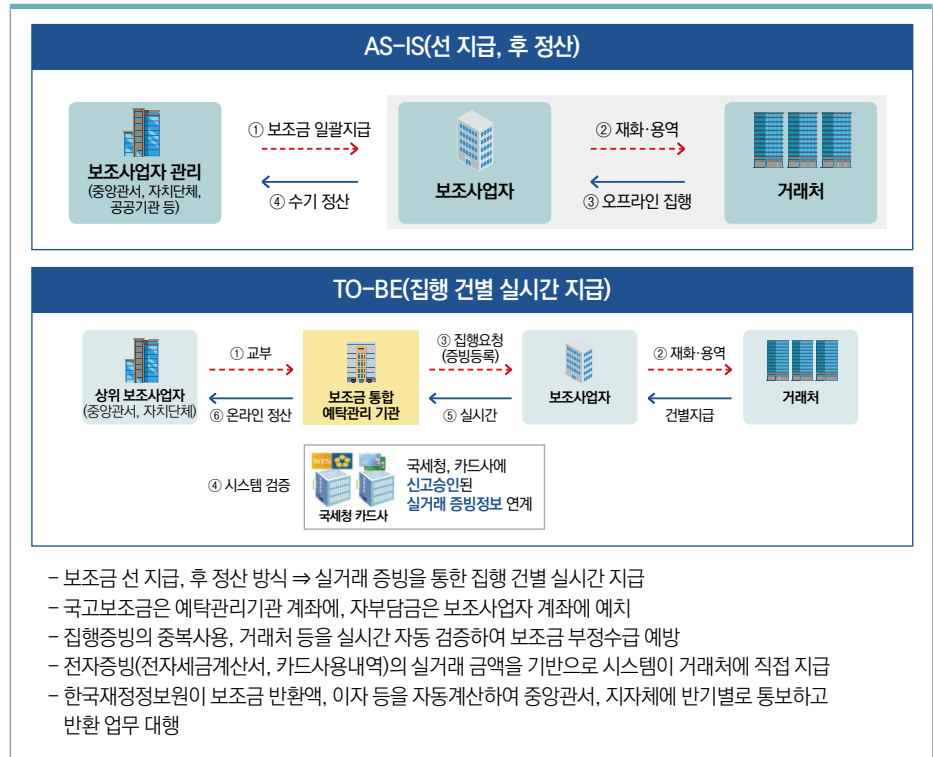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국고보조금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보조금 업무 전(全) 과정을 전자화·통합화하여 운영 중이다.

e나라도움이 도입되고 가장 달라진 점은 보조금 예탁관리를 통해 보조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탁관리 도입 이전에는 보조금 전액을 선지급 후 수기 정산하거나, 집행잔액을 보조사업자가 직접 자체 반환하는 등 불투명한 금융거래와 허술한 관리체계로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금 예탁관리를 통해 보조금을 시작부터 끝까지 투명하고 적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예탁관리기관을 통한 명확한 보조금 교부, 증빙 기반의 실시간 집행과 온라인 정산·반납의 현실화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근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예탁관리 도입 전후 비교



02 ● 예탁관리 근거와 규모는?

한국재정정보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에 따라 보조금 예탁계좌 관리 및 금융업무를 수행 중이다.

보조금 예탁계좌 평균잔액¹은 2017년 첫해에 2.5조 원에서 2019년 6월 4.8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예탁금 관리규모도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국고보조금 규모 및 예탁계좌 평균잔액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국고보조금	59.6	66.9	77.9
예탁계좌 평균잔액	2.5	4.0	4.8

¹ 평균잔액은 은행업무 마감 시제(일별)잔액의 연간 평균값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의 다양한 보조사업자들의 보조금 관련 업무 편의성(효율성) 증대와 원활한 실물 금융거래를 위해 20개 시중은행에 예약계좌를 개설하고 13개 카드사에 업무협약을 맺어 보조금 전용카드²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금융기관 현황

- **20개 은행** _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신한,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산업, 기업, 국민, KEB하나, 농협, SC제일, 우체국, 씨티,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13개 카드사** _ 광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수협카드, 우리카드, 제주카드, 전북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03

예치형 vs 비예치형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을 예약 여부에 따라 e나라도움에 보조금을 예약하는 예치형 사업과 예약 없이 직접 수행하는 비예치형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9년도 8월 기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수는 약 20만 건으로 그 중 5.5만 건이 예치형 사업이다.

예치형은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의 증빙등록 및 집행요청, 상위보조사업자 승인에 따른 실시간 집행과 정산·반납까지 보조금 전달체계 및 금융거래 전(全) 과정을 e나라도움 시스템과 예약계좌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반면 비예치형 사업은 예약계좌 이체 없이 e나라도움에서 집행등록만 진행하고 금융거래는 은행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보조금관리기관, 자치단체 및 거래처 등이 이해 당사자 간에 직접 수행하게 된다.

비예치형 보조사업의 경우, 온라인 금융거래 및 IT활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집행금액을 사후 정산 사업 등 사업특성 상 예외사유를 감안하여 보조금관리기관이 결정한다.

비예치형 사업 예시

- ✓ IT취약계층 보조사업자 대상 사업
- ✓ 보조사업 집행금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사업
- ✓ 해외보조사업자 대상 사업 등



² 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보조사업자의 카드발급정보 및 사용정보가 e나라도움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그림 2.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거래 흐름도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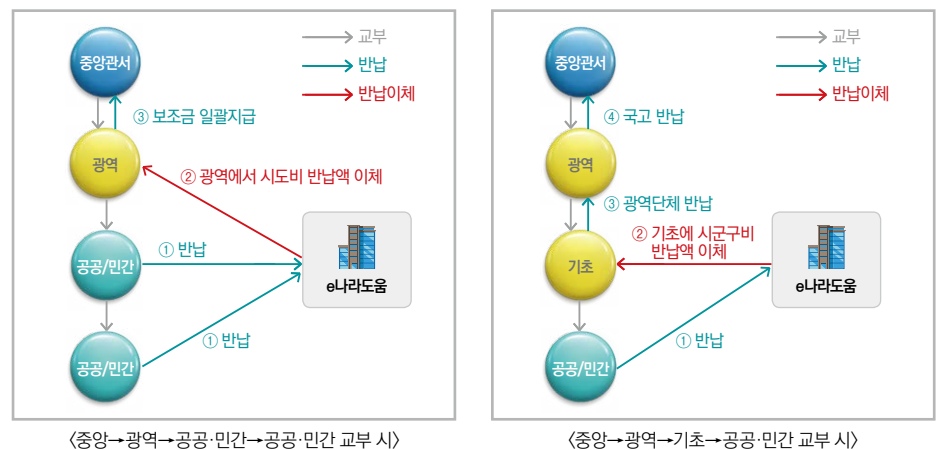
● 예탁금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업무는?

e나라도움은 예탁금 운용의 신뢰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6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 국고보조금 정산반납

보조사업 종료 및 정산에 따라 각 재원별³로 반환 요청된 이자와 집행잔액을 e나라도움에서 검토하여 중앙관서·지자체에 반납이체 처리한다. 국고보조금 반납 업무절차 일원화를 통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누락 및 오납여지를 방지한다.

그림 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절차 흐름도



3. 국고보조금 재원은 재정을 총당한 원천에 따라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등으로 구분된다.

② 예탁금 잔액, 입금액 및 출금액의 적정성

e나라도움과 20개 은행에 각각 저장된 월별·일별 잔액과 분기별 입·출금 내역의 불일치 여부를 정기점검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은행과 사유분석 후, 관련 기관에 게 통보하고 거래내역을 정정한다.

그림 4. 잔액 및 입출금액 적정성 검토



③ 은행별 예금 이자 적정성 검토

발생이자와 관련하여 은행이 e나라도움으로 전송한 이자 정보와 실제 발생이자가 동일한지와 각 은행별 약정이자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이자 수령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점검하고, 약정이자와 상이한 경우 해당은행과 사유확인 후 적정이자가 지급되도록 관리한다.

$$\text{이자율 역산} = \frac{\text{연간 예금이자 수령액}}{\text{최종이자 수령직전 일평균 예금잔액}} \times \frac{365}{365 - \text{연말까지의 잔여일수}}$$

그림 5. 은행별 예금 이자율 검토 예시

구분	A 은행	B 은행		Q 은행
최종 이자 수령일	'18. 12. 17.	'18. 12. 24.	'18. 12. 23.	'18.12.18.
㉓ 최종이자 수령일로부터 12/31까지의 잔여일수	15	8	9	14
㉔ 최종이자 수령 직전일까지의 일별 예금잔액 합계	XXX,XXX	XXX,XXX	XXX,XXX	XXX,XXX
㉕ 최종 이자수령 직전일까지의 일 평균 예금 잔액 [㉔ / (365-㉓)]	XXX,XXX	XXX,XXX	XXX,XXX	XXX,XXX
㉖ 연간 예금이자 수령액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
이자율 역산 [㉖/㉕ * (365/(365-㉓))]	X.XX%	X.XX%	X.XX%	X.XX%

④ 고액 출금 상위권 확인

고액출금 상위 20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내역 자료와 첨부서류의 정합성을 집중 점검한다.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중복부정수급 관련 부서로 해당 건을 이관하고 점검요청한다.

⑤ 부외부채⁴ 존재 여부 확인

은행별 금융기관 조회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예치계좌의 사용제한 및 담보제공 등 부외부채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조치의뢰한다.

금융기관 조회서 상 부외부채 점검사항

- | | |
|---|------------------------------------|
| ① 조회대상 계좌의 인출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조회대상 계좌와 연계하여 제공한 대출금 내역 |
| ③ 조회대상 계좌와 관련된 담보제공 및 기타 약정사항 | ④ 타 법인(개인)을 위하여 조회대상계좌를 담보로 제공한 내역 |
| ⑤ 재정정보원에 교부한 어음 수표의 내역 및 재정정보원의 어음, 수표 내역 | |

⑥ 전용선-폐쇄망 외 출금거래

마지막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창구거래 등을 검토하여 금융업무 적정성을 검증하고 특이 거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05

맺음말

예탁관리의 안정성 유지는 투명한 국고보조금 전달체계운동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예탁 및 금융업무는 작은 사고에도 대규모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조금 관리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e나라도움은 금융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교차 검증하여 철저하게 보조금 관리의 안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예탁관리 선진화를 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개선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예탁관련 금융거래 복잡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 횟수가 많고 단계가 복잡할수록 금융사고의 위험은 배가되므로, 향후 e나라도움의 예탁관리업무 개선시 간결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둘째, 안정적 예탁관리에 더하여 예치에 따른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국가예산 예치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수익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수금이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탁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e나라도움은 “예탁금고 선정” 사업 추진을 통해 금융거래 복잡도를 개선하고, 예치에 따른 금융수익이 증대되도록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보조금 예탁운용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⁴ 부외부채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채를 말한다.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배정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jb07e@jnu.ac.kr)



01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한 국민의 2020년 예산에 대한 요구가 2019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현재 2년째 운영 중이다. 2017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8년 처음 시행하여 총 38개 사업, 928억 원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다(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제안한다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제안의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사업제안 이후 사업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참여하여 참여의 폭도 넓어졌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첫째, 정부기관은 국민들의 국가정책 수요에 대한 관심분야와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생활밀착형 사업과 취약계층지원 사업이 주를 이룬다.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제거(저감)장치 설치 사업, 미세먼지저감 도시 숲 조성,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사업, 청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사업,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 시외버스 도입 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산규모를 보면 미세먼지 500억원, 청소년 140억 원, 취약계층 48억 원 순으로 지원되었다(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둘째,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으며 참여예산 운영의 전 과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는 참여예산 콘텐츠를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며 제안 및 심의과정에 도움이 되는 예산 학교 강좌와 부처별 세부사업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등의 재정정보공개 플랫폼들과 함께 잘 활용하면 재정운용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재정정보공유는 국민과 정부기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예산낭비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방지하는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국회의 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민의 대리인에게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다(권향원 외, 2017; Fung & Wright, 2001). 숙의민주주의는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집단 중심의 의사결정이 아닌 일반 국민이 주축을 이룬다. 숙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방법은 비전문가인 시민토론단이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 학습, 숙의, 토론을 수행하면서 심사숙고하여 찬반을 결정해간다(Fishkin, 1991). 국민은 숙의적 토론에 바탕을 둔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와 시민패널 방식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국민들은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숙의하면서 적정한 세입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공약은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무분별하고 낭비적인 예산편성도 궁극적인 재정책임이 국민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걸 직시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제언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숙의민주주의가 참여과정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도출해볼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숙의민주주의를 잘 구현되고 있는지는 예산국민참여단 위원선정의 포괄성, 투명한 정보 공개, 공평하고 성찰적인 숙의과정 등에 의해 가늠해 볼 수 있다(배정아·엄인주, 2017; 김광구 외, 2013).

첫 번째로 포괄성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국민참여단 선정에 있어서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예산편성 숙의과정은 가능한 한 의견을 달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참여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자원과 권력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현행 예산국민참여단의 선정은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을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예산국민참여단 위원선정의 포괄성이 어느 정도는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두 번째로 투명성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국민참여단이 예산편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예산국민참여단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반대의 견이나 찬성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상호학습 및 토론과 설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산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예산학교는 예산국민참여단 회의 일정별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투명성은 예산국민참여단에만 국한되기보다는 참여단의 숙의과정 및 결과가 신문, 방송,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 국민 누구나에게 운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소수만이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숙의민주주의 구현이라고 볼 수 없다.

세 번째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공평하고 성찰적인 숙의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전국에서 모집된 예산국민참여단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참여예산 후보 사업을 심사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예산국





민참여단은 상호간의 생각나누기, 질문하기, 경청하기 등 숙의과정을 통해 개인의 의견이 조화되어 집단의 의견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숙의 과정에서 행정 관료나 전문가가 토론을 주도하게 되면 참여주체의 권력과 자원배분에 있어서 편향성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자금과 조직력, 전문적 지식, 정보를 편향되게 사용할 경우 토론과 설득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차이가 억압받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찬반의견을 달리하는 정보제공자의 균등한 발표 및 보충설명의 기회, 토론에 참여한 주민들의 발언 및 질문에 대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쟁점 이외에도, 국민참여의 효과보다는 행정비용이 더 클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숙의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하향식으로 신속하게 결정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갈등이나 예기하지 못한 집행결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그 구성이나 운영과정이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상향식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토론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숙의민주주의에 근접하다는 것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2020년부터는 국민제안 접수기간이 상시화 되고, 찾아가는 사업제안 설명회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예산을 홍보하고 활용하여 일반국민의 숙의적 참여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권향원·김성민·한수정. (2017). “숙의 거버넌스의 저해요인 연구: 한국의 사례들의 메타분석.” 한국거버넌스학보, 제24권 제2호. pp.189-216.
- 김광구·오현순·김영곤. (2013). “갈등해소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숙의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7권 제3호. pp.85-116.
- 배정아·엄인주.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지방정부의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 분석.” 한국거버넌스학보, 제24권 제3호. pp.259-277.
- Fishkin, J.S. (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democratic reform. Yale University Press.
- Fung, A. & Wright, E.O. (2001). Deepening democracy: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Politics & Society, Vol. 29 No. 1, pp.5-41.
-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https://www.mybudget.go.kr>>

예산과 재정의 국민 참여에 관한 단상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baes@skku.edu)



02

오랫동안 정부의 예산과 재정 분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취급되면서 국민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왔다. 예산과 재정 분야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기술적 전문성이 우선시되던 영역이었다. 하지만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스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 상파울루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지방정부들에서 채택·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시행하였고,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확산되었다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201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숙의하고 논의하여 사업을 직접 결정한다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언뜻 직접민주주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로 비춰진다. 사실 예산과 재정 분야에 국민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장려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의 발전과 숙성에 기여할 여지는 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각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재정민주주의가 마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먼저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는 어떤 장점을 끌어낼 수 있을까?

우선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Right to Know)’를 충족할 수 있다. 정부의 모든 활동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자유, 권리, 복리를 신장하는 데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얼마나 세금을 내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자 한다. 따라서 예산과정의 투명성, 재정 정보의 공개성 등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행복 추구에 기여할 여지는 커 보인다.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와 정책은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국민 자신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게 된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제안한 사업이 어떤 논의와 심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민주성뿐만 아니라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숙의성과 성찰성을 제고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인구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시민의 참여는 자신의 제안과 의견이 예산과 재정 분야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가시성과 효능감을 높이게 된다. 이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촉발시키는 선순환의 고리를 확고히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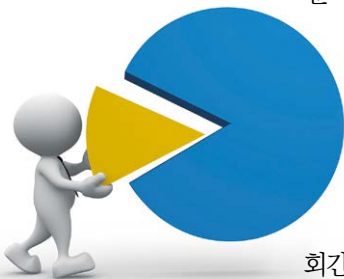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는 정치인과 관료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주인-대리인 모형, 예산극대화 모형 등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인이나 관료는 자신의 목적 달성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남용·오용하게 된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확장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는 데 예산과 재정을 활용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관료 역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생존과 권한을 극대화하는 데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결국 예산과 재정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로써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는 역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참여는 정치인과 관료의 권력 남용·오용 가능

성을 낮추고 국민의 세금이 옳은 방향으로 적절하게 쓰이도록 할 수 있다.

국민이 예산과 재정 분야에 직접 참여하면 정부 부처 내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은 정부 부처의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 정부 부처 사업을 선정, 심의, 집행 및 평가하는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정부 부처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오늘날 정부 조직은 과거 일사불란한 명령체계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소통의 증진을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에 볼 때, 예산과 재정 분야에 국민의 참여는 정부 부처 조직에 활력과 긴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예산 과정, 재정의 운용과 관리에 직접 참여하면 다수의 횡포, 여론의 조작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고 나아가 종교, 인종 등 소수자의 의견이 표출되고 취합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산과 재정 분야에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은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반민주주의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소수자의 의견이 압살될 우려와 가능성이 커지며 다수의 횡포가 오히려 조장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언제나 선동과 선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여러 사례들에서 확인된다.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할 경우에 다수의 입맛을 사로잡는 사업들이 더욱 많이 제안되고 채택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들이 더욱 궁지에 몰리고 이들이 실질적 혜택으로부터 고립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분야는 때때로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만으로는 예산과 재정의 전문성을 대체하지 못하므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확장은 국가 차원에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사업의 완급, 중요도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고려와 판단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시각을 놓치고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정책 추진에만 매몰될 우려가 있다.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오히려 할거주의와 파벌주의를 조장하고 이익집단들이 난무하는 사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국방, 환경, 복지,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 등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분야이다. 만일 인기투표와 유



사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길을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되며 국가 차원에서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와 긴 항관계에 있으며 이들 간에 충돌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예산국민참여단을 구성하는 위원들이 과연 대표성을 갖는가라는 점이다. 예산국민참여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 사업들을 국회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채택해야 할 것인가. 대표성은 누가 더 확보하고 있는가. 이러한 대표성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채택·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국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예산과 재정 분야에 도입되는 오늘날의 추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는 분명히 명과 암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단지 예산과 재정 분야에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무한정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자칫 민주주의에 독소로 작용하며 민주주의의 성숙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양자의 극단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중용적 접근과 방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물론 예산과 재정 분야에 국민의 참여 범위와 정도가 어느 지점에서 중용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시대적 상황이나 여건, 국민의 민주적 태도, 민주주의 성숙도 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집단적 지성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국민참여예산

최정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ungwoo1088@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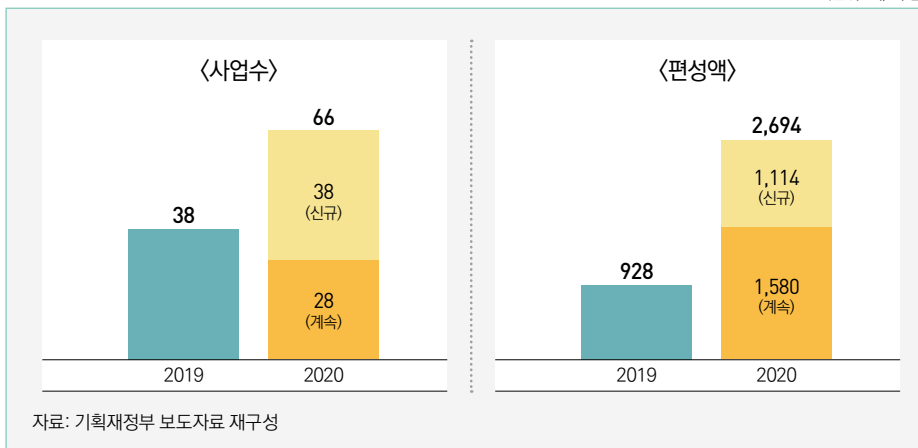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를 근거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국가예산 편성에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을 국민이 제안하면서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다.

-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 예산에는 38개 사업, 928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2020년도 예산안에는 총 66개 사업 2,694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 규모가 확대
- 2019년에 추진하였던 사업 중 28개 사업, 1,580억 원은 2020년도 예산안에 계속 반영되어 국민이 발굴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됨
- 2019년도 사업 중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450억 원)' 등 미세먼지 관련 사업 991억 원,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지원(13억 원)' 등 취약계층 관련 사업 47억 원, '장병 패당형 동계점퍼 시범자금(123억 원)' 등 청소년 관련 사업 153억 원 등이 2020년에도 편성

그림 1. 국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수 및 편성액 비교

(단위: 개, 억 원)





□ 2020년에 신규 반영된 38개 1,114억 원 규모의 사업은 아동(361억 원), 영세사업장 지원(289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생활밀착형 사업 등이 다수 포함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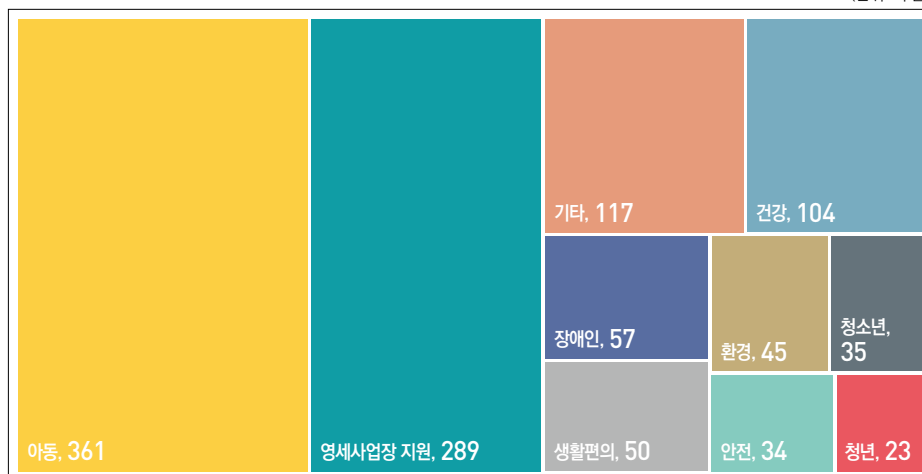
○ 96개 사업(2,663억 원)의 후보사업 중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문제해결형 참여방식*'과 국민 참여단(400명) 및 일반국민(2,000명)의 투표·우선순위 결정 등 논의과정을 통해 최종 사업 선정

* 기존 참여단 논의와 더불어 특정 이슈(보육, 소상공인, 청년)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 발굴

○ 아동·청소년·청년·장애인 등의 지원을 위한 15개 사업 556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건강·안전·생활편의 제고와 관련된 사업이 23개 558억 원 규모로 편성

그림 2. 2020년도 예산안 신규 반영 국민참여예산 분야별 편성 규모

(단위: 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구성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kr)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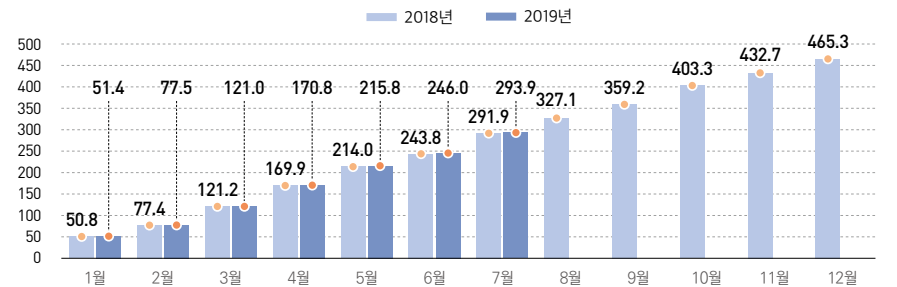
1. 최근 재정통계

총수입

2019년 7월 중 총수입은 47.9조 원이며,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총수입은 293.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 원 증가하였다. 진도율¹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한 61.7%이다. 이는 국세수입 189.4조 원(전년 대비 0.8조 원 감소), 세외수입 15.5조 원(전년 대비 1.3조 원 감소), 기금수입 89.0조 원(전년 대비 4.2조 원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

총수입
293.9조 원

총수입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2019년 7월 중 국세수입은 33.2조 원(부가가치세 18.4조 원, 소득세 7.4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증가하였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189.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조 원 감소하였다. 세수 진도율²은 64.2%으로 2018년 결산 기준 진도율(64.8%) 대비 0.6%p 하락하였으나 최근 5년(2014년~2018년) 평균 진도율(63.0%) 대비 1.2%p 상승하였다.

¹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수입 예산은 447.7조 원이며 2019년 추경 기준 총수입 예산은 476.4조 원이다.

²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국세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국세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국세수입 예산은 268.1조 원이며 2019년 추경 기준 국세수입 예산은 294.8조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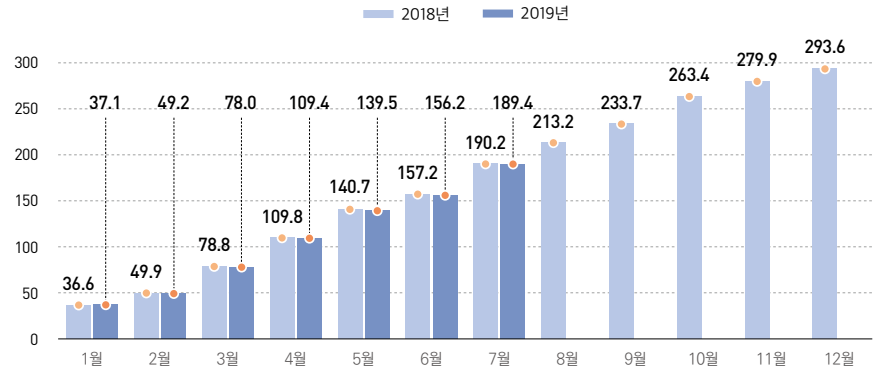


국세수입

189.4조 원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data.go.kr)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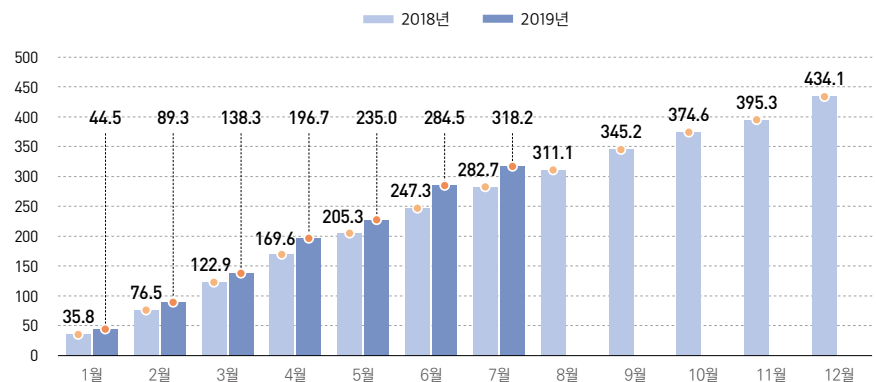
2019년 7월 중 총지출은 33.7조 원이며,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총지출은 318.2조 원이다. 진도율은 66.9%로 전년 동기 대비 35.5조 원 증가(진도율 1.6%p 상승)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22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5.0조 원 증가하였고, 기금은 8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6.2조 원 증가하였다.

총지출

318.2조 원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data.go.kr)

3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지출 예산은 432.7조 원이며 2019년 추경 기준 총지출 예산은 475.4조 원이다.



2019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⁴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7월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은 182.4조 원으로, 연간 계획(252.6조 원) 대비 72.2%를 집행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는 151.5조 원(연간 계획 대비 72.6%), 40개 기금에서는 30.9조 원(연간 계획 대비 70.7%)을 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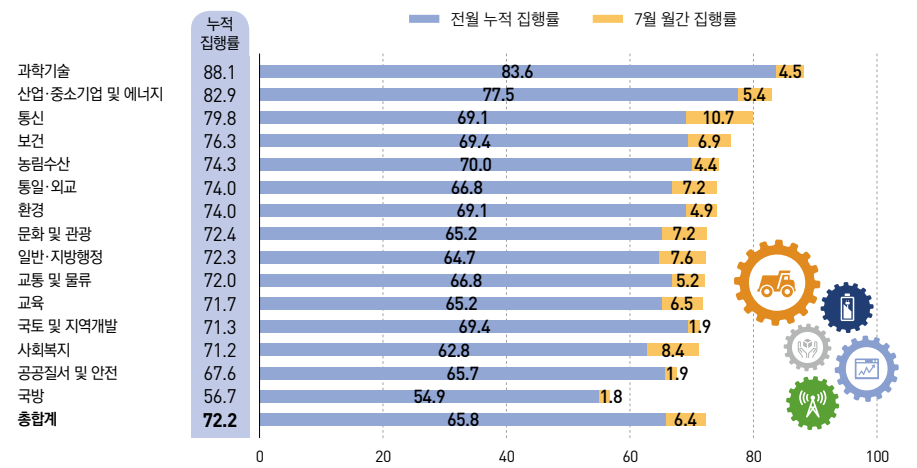
7월 말까지의 주요 분야별 집행률은 과학기술(88.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82.9%), 통신(79.8%), 보건(76.3%) 분야 순으로 높으며, 국방(56.7%), 공공질서 및 안전(67.6%), 사회복지(71.2%) 분야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7월 월간 집행률은 6.4%이며, 분야별로는 통신(10.7%), 사회복지(8.4%), 일반·지방행정(7.6%), 통일·외교(7.2%)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누적 집행률
72.7%
월간 집행률
6.4%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정수지

2019년 7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4.3조 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24.0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2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3.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32.7조 원 악화되었으나, 이는 7월 중 재정수지⁵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전월 말 기준 대비 적자폭이 개선되었다.

⁴ 재정집행관리 점검 대상인 45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된다.

⁵ 7월 중 통합재정수지는 14.2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1.3조 원 흑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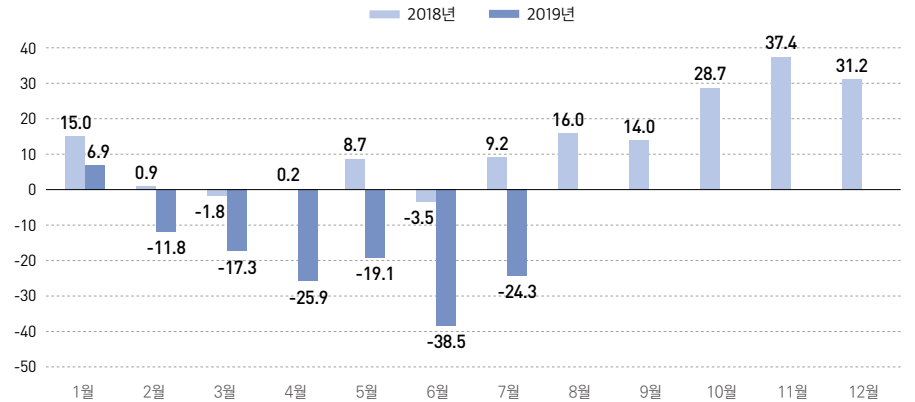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24.3 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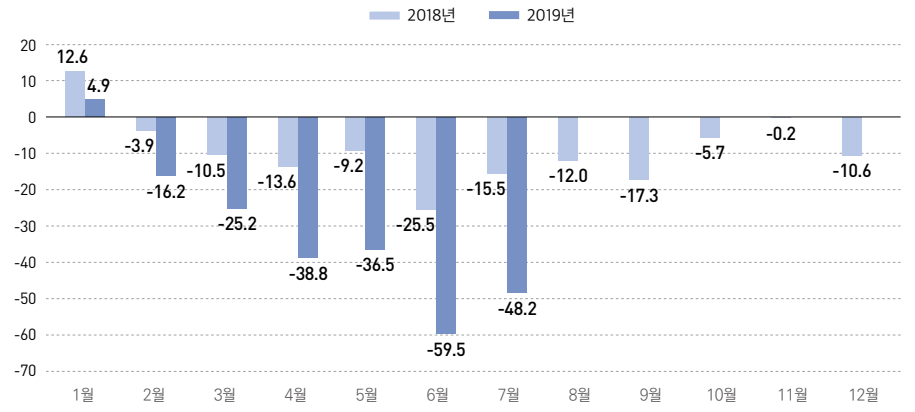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관리재정수지

48.2 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중앙정부 채무

2019년 추경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⁶는 701.9조 원이며, 7월 말 현재 692.2조 원이다. 이는 국고채권 잔액 증가(5.6조 원), 외평채권 잔액 증가(0.2조 원) 등에 따라 전월 대비 5.4조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2018년 결산 기준) 대비 40.4조 원 증가하였다.

⁶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되며,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한다(2018년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680.7조 원으로 지방정부 채무(잠정치) 28.9조 원이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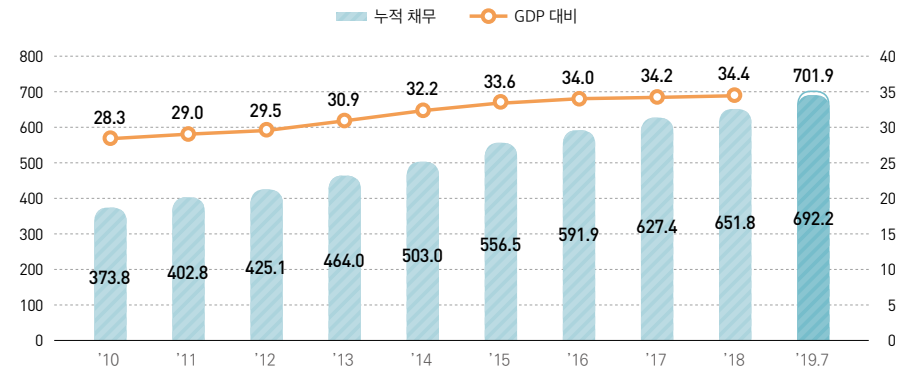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692.2조 원

중앙정부 채무 추이(누계 기준)

(단위: 조 원, %)



주: 1) 2019년은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규모를 나타냄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 → 2015년 기준년 개편, '19.6.4.)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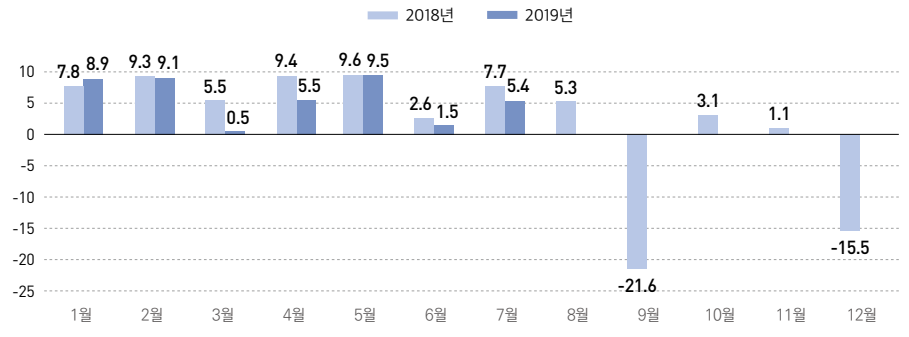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순차입 전월 대비

5.4조 원

중앙정부 채무 순차입 추이

(단위: 조 원)



주: 순차입이란 특정 기간 내에 국고채 발행 또는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증가 규모에서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감소 규모를 제외한 잔액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국유재산

2019년 7월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1,087.2조 원으로 전월 대비 1.4조 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재산⁷ 812.6조 원(전월 대비 1.4조 원 증가), 일반재산⁸ 274.5조 원(전월 대비 0.1조 원 감소)으로 구성된다.

⁷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청·관사, 도로, 하천 등이 이에 해당된다.

⁸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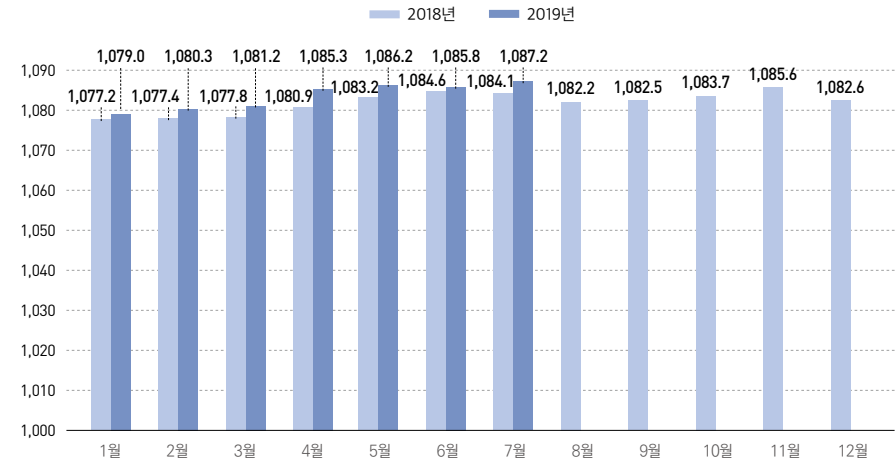


국유재산 현액

1,087.2조 원

국유재산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18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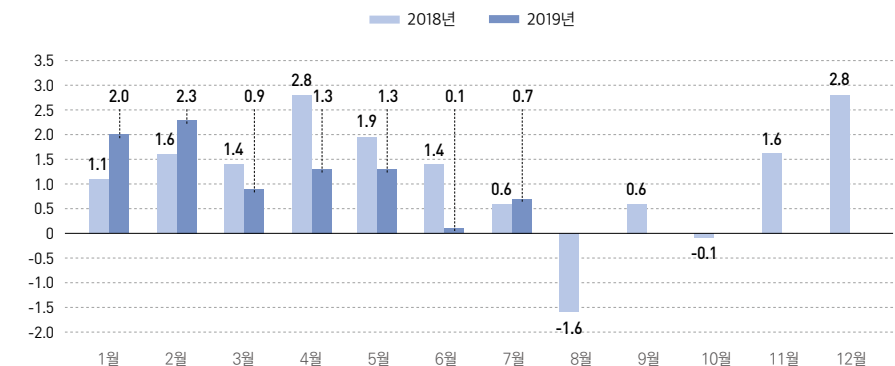
7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1조 7,373억 원이며 전월 대비 7,820억 원 증가했다. 처분 총액은 1조 84억 원으로 전월 대비 1,598억 원 증가하였으며, 7월 중 취득 총액이 처분 총액을 7,289억 원 초과한다.

국유재산 순취득 총액

0.7조 원

국유재산 순취득(취득-처분)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18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3) 순취득이란 매입, 교환 및 환지, 신규등록 및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에서 매각, 교환 및 환지, 멸실 및 양여로 인한 처분을 제외한 규모를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2. 분야별 통계: 농림·수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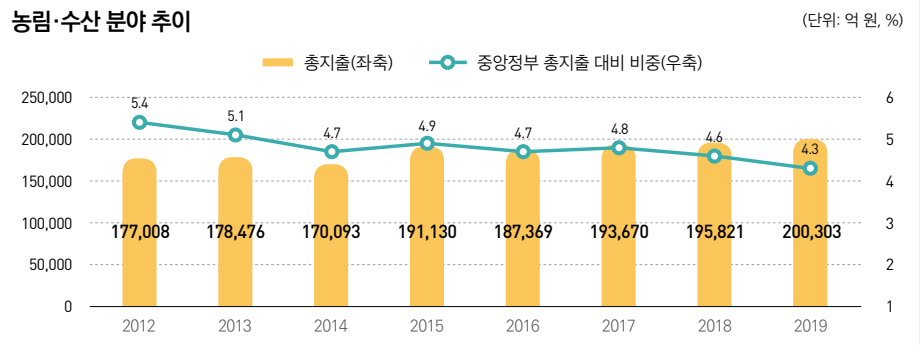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15대 분야(예비비 제외) 중 **농림·수산 분야**의 재정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구조와 추이

2019년 농림·수산 분야의 총지출은 20조 303억 원(총지출 대비 4.3%)으로 2018년(19조 5,821억 원) 대비 4,482억 원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농림·수산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은 평균 4.8% 수준이다.

농림·수산 분야
20.0조 원



주: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2019년 본예산 기준 농림·수산 분야는 일반회계 2조 8,481억 원(농림·수산 분야 총지출 대비 14.2%), 특별회계 11조 4,621억 원(57.2%), 기금 5조 7,201억 원(28.6%)로 편성되었다. 농림·수산 분야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편성되었고,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복권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2.8조 원

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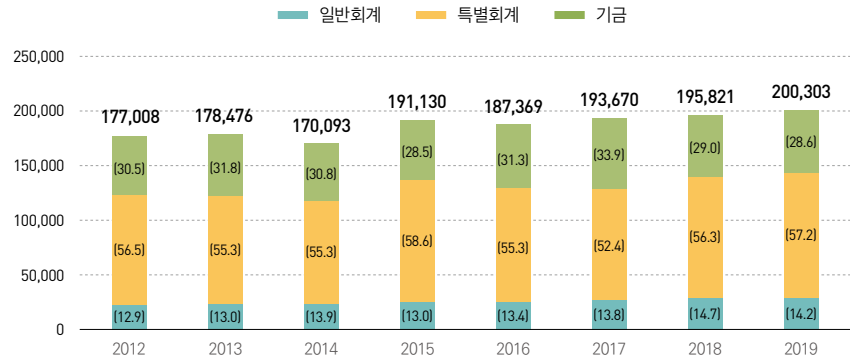
11.4조 원

기금

5.7조 원

농림·수산 분야 회계·기금별 현황

(단위: 억 원, %)



주 1)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농림·수산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 기준 농림·수산 분야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11조 4,621억 원이다.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가 7조 1,642억 원으로(농림·수산 분야 특별회계 합계 대비 62.5%)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조 1,462억 원, 18.7%), 양곡관리특별회계(1조 9,748억 원, 17.2%) 순으로 편성되어 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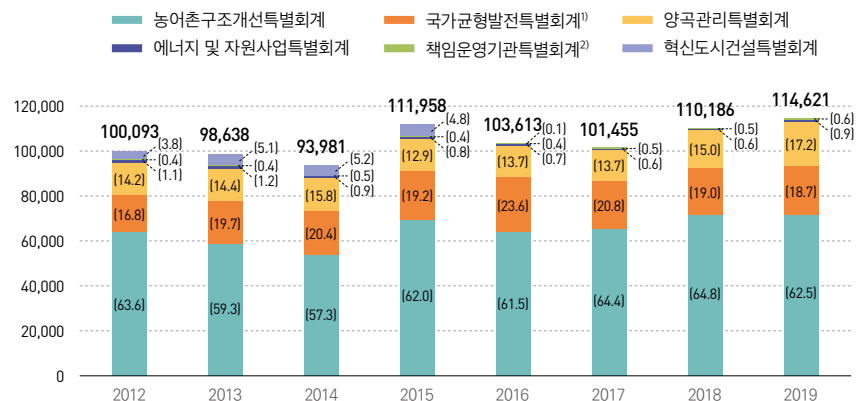
7.2조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조 원

농림·수산 분야 특별회계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4년까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포함

3)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4)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농림·수산 분야 특별회계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해 1992년 설치되었다. 주요수입은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 용자금의 원리금, 그 밖의 수입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렵장 사용료, 농어촌특별세액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출연·보조·융자와 더불어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의 후생복지 증진 및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 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등으로 지출한다.

2019년 운용규모는 11조 9,030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4조 1,799억 원, 자체수입 8,905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6조 8,326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일반지출 7조 2,759억 원,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4조 6,271억 원으로 구성된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운용 규모

11.9조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 기준 농림·수산 분야 기금의 편성 규모는 5조 7,201억 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2조 1,483억 원으로(농림·수산 분야 기금 합계 대비 37.6%) 가장 규모가 크며, 그 다음으로는 농지관리기금(1조 2,057억 원, 21.1%), 축산발전기금(8,763억 원, 15.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6,581억 원, 11.5%)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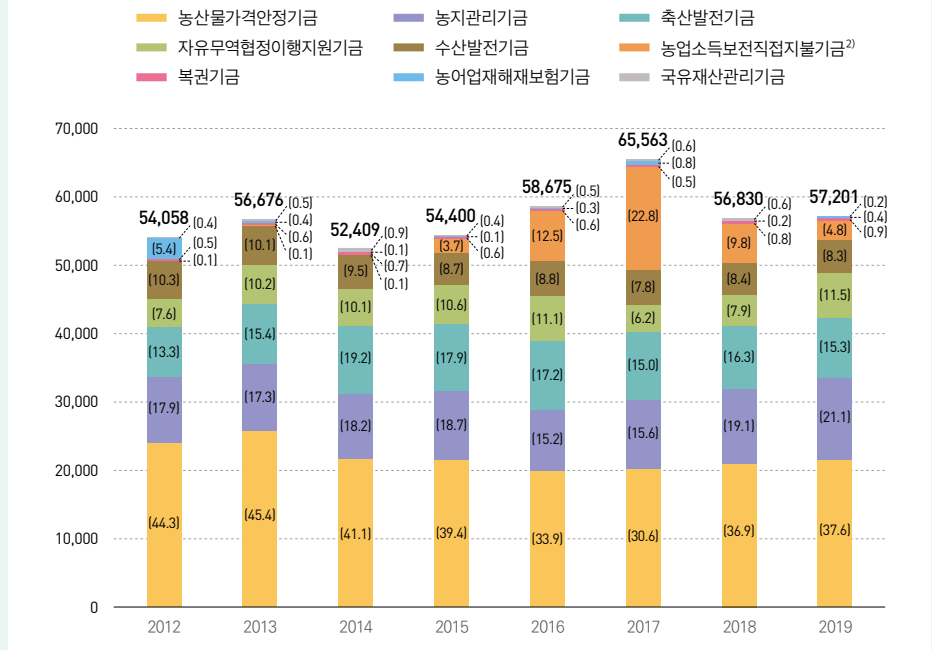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 조 원

농림·수산 분야 기금 운용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2014년까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3)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농림·수산 분야 기금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66년 설치되었다. 정부의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농산물 수입이익금 및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납입금,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농산물의 가격조절, 생산·출하 장려 또는 조절, 수출 촉진, 보관·관리 및 가공, 상품성 향상과 함께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거래대금 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 안정 및 종자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지출한다.

2019년 운용규모는 2조 4,025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2조 1,732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1억 원, 여유자금회수 2,242억 원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사업비 2조 962억 원, 기금운영비 520억 원, 여유자금운용 2,543억 원으로 구성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규모

2.4조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수산·어촌, 임업·산촌, 식품업까지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농업·농촌 부문으로 74.5%(14조 9,143억 원)를 차지하고, 수산·어촌 부문 11.2%(2조 2,448억 원), 임업·산촌부문 10.9%(2조 1,743억 원), 식품업 3.5%(6,970억 원)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농촌

14.9조 원

수산·어촌

2.2조 원

임업·산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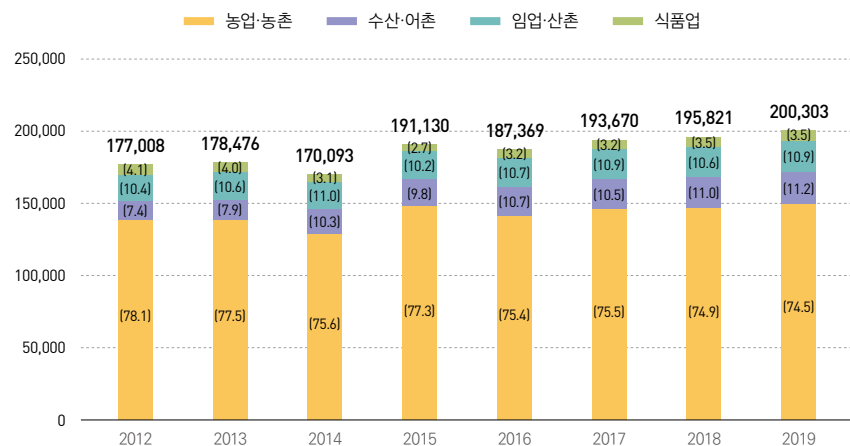
2.2조 원

식품업

0.7조 원

농림·수산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농림·수산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2) 2018년도까지는 결산, 2019년은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농림·수산 분야 사업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정부양곡매입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사업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 사업이 편성되었다.

정부양곡매입비 사업

1.1 조 원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양곡관리특별회계, 1조 1,051억 원)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및 운용과 ASEAN+3의 비상 쌀 비축 협정(APTERR)¹에 따른 해외공여용 미곡의 비축, 양곡수급조절 대행으로 발생한 농협채권 정산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0.9 조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014억 원)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사업

0.8 조 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² 사업(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028억 원)은 쌀시장 개방 확대 등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주곡의 생산기반 유지 및 논외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세먼지저감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402억 원

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관리 사업(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02억 원)은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생활권 녹지공간의 축소, 환경오염 등에 대응하여 도시숲의 확대조성·기능강화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 노후 산업단지 주변, 도시재생사업지 등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 바람길숲 조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¹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협정(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greement)은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에 활용하기로 약정한 협정이다.

²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재배품목 및 쌀값과는 관계없이 농지 형상을 유지하면 해당 농지의 경작자에게 헥타르(ha)당 100만 원의 직불금을 해당연도 말에 지급하는 보조사업이다.

이달의 이슈 키워드
「수출규제」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수출규제'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절차 강화 조치 발표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kr)



연관어

일본

추경

반도체

소재

대응

규제

보목

무엇을

WTO

아베

삼성

판매단위

강제징용

불화수소

기술개발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 시 포괄수출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의 전환을 발표하였다(7월 4일 시행). 또한, 8월 2일에는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8월 28일 시행)의 개정을 각의 결정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절차 강화로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산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반영, 세액공제 확대, 관련 규정 개정과 같이 예산·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5조 8,269억 원 규모(총지출 475.4조 원)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포함)이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외산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사업화되지 못한 제품의 신뢰성 평가 및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핵심품목 기술개발 957억 원,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장비 구축 1,275억 원, 양산 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500억 원 등 모두 2,732억 원(11개 세부사업)이 증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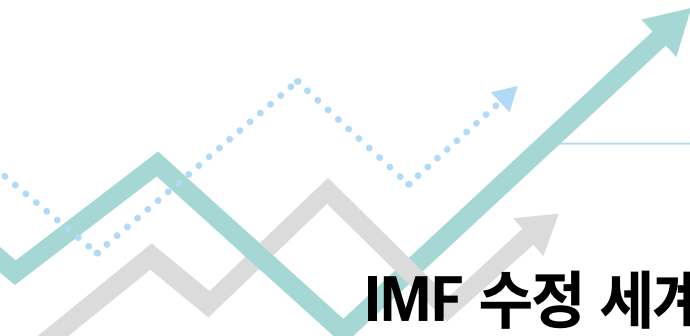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돕기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R&D) 사업에 650억 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에 217억 원,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R&D) 사업에 5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 사업은 대일 의존도가 높고 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과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R&D)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원천기술은 확보하였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되지 못한 제품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 그리고 평가기간 단축(6개월→3개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사업에 400억,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R&D) 사업에 320억 원 등을 증액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R&D) 사업에 350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사업은 소재부품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고,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R&D) 사업은 핵심품목에 대한 생산시설, 기계·시스템, 개발용 연구장비 등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새로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R&D) 사업을 추진하며 주요 양산라인에 자체조달이 가능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대체 가능성 평가를 지원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R&D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양산 가능 기업의 생산시설·설비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기반자금(용자) 사업에 300억 원, 창업기업자금(용자) 사업에 200억 원 등 500억 원을 증액하였다. 신성장기반자금(용자) 사업은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망자금으로 시설투자 및 초기가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창업기업자금(용자) 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소재·부품·장비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¹⁾,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8월 9일 입법예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M&A)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R&D)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도 확대하여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과 같이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R&D 투자 시 대·중견기업은 20%(추가 최대 10%), 중소기업은 30%(추가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¹⁾ 예비비 목적으로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대응에 필요한 긴급한 재정지원"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다.



IMF 수정 세계경제전망 :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Update, July 2019」

국제통화기금(IMF)은 정기적으로 연간 2회(4월, 10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WEO)를 발간하고,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 연 2회(1월, 7월)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발간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7월 발표된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19」의 주요내용과 주요 하방리스크 및 정책 우선수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jeon@kpfis.kr)





세계경제 전망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WEO)를 통해 2019년과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2%, 3.5%로 지난 4월 전망치(3.3%, 3.6%) 대비 0.1%p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 등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추가적인 무역제재 전망에 따른 글로벌 기술(IT분야) 공급망(Global Technology Supply Chain)의 위협,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지속,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변동 등을 지적했다.

경제규모별로 전망치를 나누어 살펴보면, 선진국경제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1.9%, 1.7%로 지난 4월 전망(1.8%, 1.7%) 대비 2019년이 0.1%p 상향되었다. 이는 4월 전망치 대비 독일(-0.1%p)과 일본(-0.1%p)이 하향 조정된 반면, 1분기 좋은 경제상황을 보였던 미국의 전망치가 0.3%p 상향 조정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신흥개발도상국 경제성장률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4.1%, 4.7%로 전망되었으며, 지난 4월 전망대비 각각 0.3%p, 0.1%p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주요 신흥개발도상국들의 전망치가 4월 전망대비 하락한 데 기인하는데, 주요 신흥개발도상국의 2019년 전망치를 살펴보면 4월 전망대비 중국 -0.1%p, 인도 -0.3%p, 브라질 -1.3%p, 러시아 -0.4%p 등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주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 Dominate)

이번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 국가 간 고조된 무역·기술 갈등, 위험회피 현상(Risk-Off Episode)¹ 발생가능성 및 그에 따른 금융 취약성(Financial Vulnerabilities) 증가 위험, 물가상승률 둔화(디스인플레이션) 압력, 지정학적 긴장 등이 있다.

무역 및 기술 공급망의 혼란

2018년 초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및 각종 무역 보복조치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 장기화 등의 이슈로 인해 기업 경기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되었다. 더욱이 지난 5월에는 미국의 중국 기업(기술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관세 위협² 등의 이슈가 등장하며 무역관련 긴장

¹ 위험회피 현상(Risk-Off Episode)이란 부정적인 경제 전망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성 자산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들(국채 등)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² 미국은 멕시코가 불법 국경이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에 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이후 불법 이민과 관련된 협상이 타결되며 멕시코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무기한 연기됐다.

은 더욱 심화됐다. 다만 6월에 들어 무역긴장이 다소 완화되는듯 하였으나, 아직까지 향후 미·중 간 관세 문제, 미국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 노딜(No Deal) 브렉시트 등과 같은 세계 경제 내 주요 위험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국가 간 신뢰도 하락, 투자 약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심각한 성장률 둔화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위험회피 성향의 증대

미·중 무역 갈등 심화는 전 세계적으로 위험회피성향을 증대시켰다. 6월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성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급속하게 위험회피 현상(Risk-Off Episode)이 유발될 수 있는 여러 잠재요소들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무역 갈등의 심화, 과잉채무 보유 국가들의 재정정책 불확실성 장기화 및 채무 악화, 주요 개발도상국들(아르헨티나, 터키 등)의 금융시장 불안 심화, 중국의 무역 갈등 및 국내 규제 강화에 따른 급격한 성장률 둔화 등이 위험회피 현상을 급격하게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만약, 이러한 위험회피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다년간 유지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누적된 금융 취약성(Financial Vulnerabilities)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높은 채무비율을 지닌 국가들의 채권 만기연장(Roll-over)을 어렵게 하거나 신흥시장(Frontier Economies)³ 전반에 걸쳐 자본흐름이 위축되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을 의미하며 성장 잠재력과 위험(Risk)도 큰 아시아, 동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을 의미한다(개발도상국 중 경제규모가 큰 BRICs 국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물가상승률 둔화⁴

물가상승률의 둔화에 대한 우려는 경기 상승국면에 있었던 2016년 중반부터 2018년 중반까지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최근 세계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경제 전반의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이 하락하면서 다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하락(Lower Inflation)과 기대인플레이션 하락(Lower Inflation Expectation)이 고착화(Entrenched)될 경우, 채무자들의 채무 원리금 상환(Debt Service)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투자 지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의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통화 정책 여력(Monetary Policy Space)⁵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로 인해 경기침체기에 적절한 통화 정책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성장률 둔화는 더욱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위험 및 갈등

기후변화는 많은 국가에서 보건과 생계(Livelihood)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활동까지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들이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 역시 미국 등 주요국들이 이탈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미미하다. 이밖에, 다른 위험 요소로 최근 몇 달 간 고조된 페르시아만의 지정학적 긴장과 기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전(Civil Strife) 등이 있다. 이는 내전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구호비용 등 관련 비용의 급격한 증가, 난민 문제, 그리고 상품 가격의 높은 변동성 유발 등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정책 우선순위(Policy Priority)

다자간(Multilateral) 정책

다자간 수준(Multinational Level)에서 시급한 사항은 무역·기술 관련 긴장 완화와 무역협정들(캐나다-멕시코-미국(NAFTA), 영국-EU(브렉시트))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신속한 해결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역국 상호간 무역수지 균형을 목적으로한 관세 부과를 지양하고, WTO의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System)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Rule-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분쟁 제소 사안의 신속한 해결, 디지털 관련 서비스·보조금·기술이전과 같은 분야를 포괄할

⁴ 물가상승률 둔화(=디스인플레이션)란 물가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만, 물가상승률은 둔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될 경우, 가계와 기업은 추가적인 물가하락을 예상해 소비와 투자를 뒤로 미루게 되어 수요가 위축되고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⁵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방법 중 하나는 기준금리 설정이 있으며, 이 기준금리는 일반적으로 0%와 장기금리 수준 사이에서 운용된다. 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라 장기금리가 하락할 경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운용 공간이 축소되는데, 이는 통화정책 공간의 제약으로 볼 수 있다.

수 있는 WTO 규정의 현대화, 디지털통상(Digital Trade)⁶과 같은 새로운 분야들에서의 협상 진전 등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국경을 초월하는 탈세 및 부패 문제, 금융 규제 개혁의 후퇴 방지 노력 등의 분야에서도 국제협력의 증진이 필요하다.

국가 수준(National Level) 정책

개별 국가 수준에서 우선 고려해야할 사안들은 포용성의 확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 강화, 잠재성장을 제약 요소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최종수요의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완화적 통화정책(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화 될 경우, 금융 취약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 및 사전적인 감독 기능(Proactive Supervisory Approach)⁷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은행위험이 국가 위험으로 전이되는 현상 즉, '국가-은행 간 악순환 고리(Sovereign-Bank Feedback Loop)'⁸ 위험 방지를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재정정책의 경우 여러 정책 목표들(Multiple Objectives)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보호, 구조개혁 지원을 통한 잠재성장을 제고, 중기이상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 성장률이 전망보다 악화될 경우, 국가별 상황에 따라 완화적인 거시경제 정책 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흥개발도상국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된 국가들에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되었다. 다만,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를 고려하여 부채 감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재원배분측면에서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들(반복적인 지출, 사업 목적과 대상이 불명확한 보조금 등)은 축소하고, 대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사회복지지출 등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갑작스러운 자본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자본 및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가령 보유자산의 통화 및 만기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자본유출에 대비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6. 디지털통상(Digital Trade)이란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활동 전반'을 의미하며,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서비스(검색엔진·소셜미디어·스트리밍 서비스·공유경제 등), 클라우드 서비스(국가 간 정보이전) 등을 모두 포괄한다.

7. 사전적인 감독(Proactive Supervisory)은 감독기관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규정 또는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일상적인 수준에서 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감독기관 주도의 높은 수준의 사전예방 활동 및 고강도의 정기적 감독 활동 등이 포함된다.

8. 국가-은행 간 악순환 고리(Sovereign-Bank Feedback Loop)란 국가가 부채 규모를 확대를 위해 자국 은행들에게 국채 매입을하도록 하여 은행위기 또는 재정위기 발생 시 국채를 통해 위험이 전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망치		2019년 4월 WEO 전망치 대비 ¹⁾	
	2017	2018	2019	2020	2019	2020
세계	3.8	3.6	3.2	3.5	-0.1	-0.1
선진국	2.4	2.2	1.9	1.7	0.1	0.0
미국	2.2	2.9	2.6	1.9	0.3	0.0
유로지역	2.4	1.9	1.3	1.6	0.0	0.1
독일	2.2	1.4	0.7	1.7	-0.1	0.3
프랑스	2.3	1.7	1.3	1.4	0.0	0.0
이탈리아	1.7	0.9	0.1	0.8	0.0	-0.1
스페인	3.0	2.6	2.3	1.9	0.2	0.0
일본	1.9	0.8	0.9	0.4	-0.1	-0.1
영국	1.8	1.4	1.3	1.4	0.1	0.0
캐나다	3.0	1.9	1.5	1.9	0.0	0.0
기타선진국 ²⁾	2.9	2.6	2.1	2.4	-0.1	-0.1
신흥개발도상국	4.8	4.5	4.1	4.7	-0.3	-0.1
독립국가연합 ³⁾	2.2	2.7	1.9	2.4	-0.3	0.1
러시아	1.6	2.3	1.2	1.9	-0.4	0.2
러시아제외	3.5	3.9	3.5	3.7	0.0	0.0
신흥개발도상국(아시아)	6.6	6.4	6.2	6.2	-0.1	-0.1
중국	6.8	6.6	6.2	6.0	-0.1	-0.1
인도	7.2	6.8	7.0	7.2	-0.3	-0.3
아세안-5 ⁴⁾	5.3	5.2	5.0	5.1	-0.1	-0.1
신흥개발도상국(유럽)	6.1	3.6	1.0	2.3	0.2	-0.5
중남미지역	1.2	1.0	0.6	2.3	-0.8	-0.1
브라질	1.1	1.1	0.8	2.4	-1.3	-0.1
멕시코	2.1	2.0	0.9	1.9	-0.7	0.0
중동 북아프리카	2.1	1.6	1.0	3.0	-0.5	-0.2
사우디아라비아	-0.7	2.2	1.9	3.0	0.1	0.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9	3.1	3.4	3.6	-0.1	-0.1
나이지리아	0.8	1.9	2.3	2.6	0.2	0.1
남아프리카	1.4	0.8	0.7	1.1	-0.5	-0.4
저소득개발도상국	4.7	4.9	4.9	5.1	-0.1	0.0
세계 무역성장률(재화 및 서비스)⁵⁾	5.5	3.7	2.5	3.7	-0.9	-0.2
선진국	4.4	3.1	2.2	3.1	-0.6	0.0
신흥개발도상국	7.4	4.7	2.9	4.8	-1.4	-0.3
상품가격(미 달러 기준)						
유가 ⁶⁾	23.3	29.4	-4.1	-2.5	9.3	-2.3
비연료	6.4	1.6	-0.6	0.5	-0.4	-0.6
(세계 원자재 수출 기준 가중평균)						
소비자물가						
선진국	1.7	2.0	1.6	2.0	0.0	-0.1
신흥개발도상국	4.3	4.8	4.8	4.7	-0.1	0.0

참고: 실질실효환율은 2019년 4월 26일-5월 24일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가정

주: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9.4.)」의 전망치와 차이

2) G7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3)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연합 공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지리적·경제구조의 유사성 등을 반영하여 포함)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5)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량 단순평균 성장률

6) 3개 유가(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 평균 가격의 변화율, 배럴당 평균 유가 \$68.33(2018년), 선물시장 기초 가격 \$65.52(2019년), 63.88(2020년)

7) 베네수엘라 제외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9.7.)」, Table 1.1 편집

청년에게 다리를 놓아 주는 ‘청년 희망사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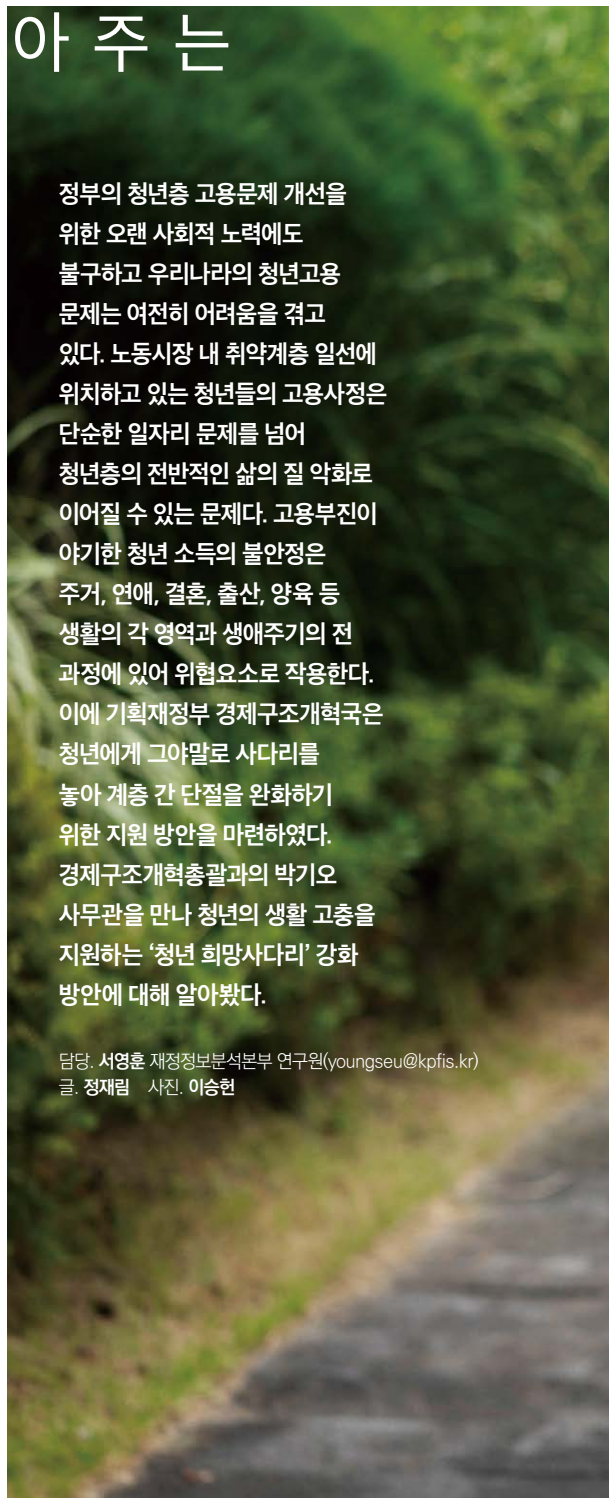
청년들이 체감 가능한 지원방안

청년 희망사다리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청년이 겪는 생활여건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자리, 주거, 교육, 취약청년 등의 4가지 분야로 청년의 어려움을 돕는 지원정책을 꾸렸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20번 이상 청년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이는 정부가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취지에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청년 희망사다리는 애초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보니 당연히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Talk Talk 희망사다리라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정부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청년이 함께 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의 박기오 사무관은 청년 정책을 담당하며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정부의 청년층 고용문제 개선을 위한 오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일선에 위치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단순한 일자리 문제를 넘어 청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고용부진이 야기한 청년 소득의 불안정은 주거, 연애, 결혼, 출산, 양육 등 생활의 각 영역과 생애주기의 전 과정에 있어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은 청년에게 그야말로 사다리를 놓아 계층 간 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의 박기오 사무관을 만나 청년의 생활 고충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담당.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kr)
글. 정재립 사진. 이승현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박기오 사무관

“산업단지, 대학교 및 청년 센터 등에 찾아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청년을 고용한 사업자의 의견도 수렴했지요. 실제로 청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 정책 수요가 많은 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정책의 부족한 점을 정비하고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간담회는 총 23번 개최되었고 그중 특별히 ‘청년이 청년에게’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청년이 청년에게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함께 모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청년이 청년에게 간담회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듣는 자리로 참석한 청년들로부터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

▶ 대학생 위한 지원 ◀

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청년들의 목소리는 실제 지원 정책에도 적용되었다. 청년 대학생 햇살론의 경우 생활자금 또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신용을 쌓을 기회가 없어 대출을 받기 힘들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 “기존의 햇살론은 재원이 모두 소진되었지만, 청년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컸다는 의견을 받아 새롭게 재원을 마련하고 재도입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분야별로 청년 정부지원 정책이 많은데 청년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보게 되었는데요. 지원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사다리2 장학금은 선취업 후학습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재직하다가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중소기업의 규모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요건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대학진로체험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니며 진로체험을 하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었다. 예로 방송 관련 업무를 희망할 경우, 방송콘텐츠를 만들어 입증하면 진로체험으로 인정하여 대학에서 학점을 부여한다.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진로상담 외에 현실적인 도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초기에는 스펙 쌓기에 집중하다가 마지막에는 취업준비에 매몰되어 그 전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생겼죠. 자신의 취업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활동해보며 이를 통해 진로를 찾는 시행착오의 시간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 임금근로자 및 비정형근로자 청년을 위한 지원 ◀

주거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이 많지만, 직접 거주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교통의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소득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정부의 주거지원대책을 활용하려 했지만 직장에서 너무 떨어져 있거나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활용이 힘들었던 것이죠.” 청년 희망사다리의 주거지원 강화방안은 교통의 요충지에 청년 거주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효용가치를 높인다. 교통의 요지에 있는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변화의 조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사업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지요. 최근에는 청와대에 **청년소통정책관실**이 신설되었고 국무조정실에는 정부 각 부처의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추진단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청년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은 역세권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세어하우스로 활용하게 된다. 그동안은 정부의 지원 단가가 높지 않아 비교적 저렴한 지역과 외진 곳의 건물을 중심으로 리모델링해왔지만, 일부 지역에 지원 단가를 올려 역세권 고시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클린업프로그램도 시행했다. 영세업체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여 근무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화장실·샤워시설 등을 개보수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간담회를 통해 다뤄진 내용 중 하나는 기존의 청년 지원정책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층을 고려해 비정형적 근로자를 위한 지원정책도 있으면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주고받는 청년들의 실태조사를 거쳐 인원과 근무환경을 파악하는 한편 산재보호

강화방안 등을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청년 창업자의 경우에는 창업 초기에 자금 부족으로 인건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전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청년전용창업융자 제도가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더 많은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박기오 사무관은 청년 희망사다리 지원정책으로 청년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이를 위해 청년의 생애주기 중 첫 단추가 되어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변화의 조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사업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지요. 최근에는 청와대에 청년소통정책관실이 신설되었고 국무조정실에는 정부 각 부처의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추진단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청년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되나요?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kr)

가정 살림을 꾸려갈 때, 수입과 지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으면 수입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지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계획하지 않은 과한 지출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예산도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야만 정부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재정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가 담당하고,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결산이 이루어지고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로 예산과정이 종결되며, 이런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편성은 「헌법」, 「국가재정법」 등에 의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¹ 내년도의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9월 국회 제출 전까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전 부처가 참여하여 예산안을 준비합니다.

전년도 1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는 향후 재정운용 여건, 중기 재정정책 및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부처)에 통보합니다. 각 중앙관서는 이 지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중기사업계획서)을 1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중기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과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정하여 예산안편성지침²을 마련합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부처에 3월 말까지 통보됩니다.

각 중앙관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차년도 예산요구서를 5월 말까지 성과계획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¹ 「헌법」 제54조 2항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3조 - 정부는 제32조(예산안의 편성)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²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방향,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예산요구 시 제출서류와 작성양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수차례 검토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국회의 예산확정 후 정부는 12월에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2020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총수입은 482.0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513.5조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³. 내년도 예산안은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생활·편의안전 증진, 튼튼한 국방·외교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직면하게 될 재정여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정부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단년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재정 소요와 국민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8.2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장 드 와브랭이 묘사한 백년전쟁, 『영국연대기』, 15세기 말.

기사가 아니라 돈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다

글 송병건 성균관대학교 교수(bks21@skku.edu)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성채를 둘러싸고 공격을 펴붓고 있다. 돌로 성벽과 능보를 높이 쌓은 성채는 중세 유럽의 전형적 형태다. 전통적 무기인 활과 창으로 공략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공격하는 병사들이 다루는 무기는 화약무기인 총과 대포다. 낯선 풍경이다. 건물은 낮익은 중세 유럽 성채의 모습인데, 병사들의 무기는 화약무기라니! 이 그림은 과거 전쟁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긴 장 드 와브랭(Jean de Wavrin)의 작품 ★이다. 1340년대 백년전쟁에서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공략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사실 이 시기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화약무기가 전투에 사용된 때였다.

그렇다면 화약무기는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세계사에 어떤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화약무기는 중국에서 유래하였다. 둔황 석굴 벽화의 일부분에서 초기 화약무기의 모습 ★★을 엿볼 수 있다. 10세기 둔황의 석굴에 그려진 이 벽화에는 석가모니가 갖가지 형상의 마라(魔羅)로부터 공격을 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석가모니의 오른편 위쪽으로 화창(火槍)을 들거나 수류탄처럼 생긴 화공무기를 쏜 악마들을 찾을 수 있다. 이 탕화는 화약무기를 묘사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화약무기가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된 것은 12세기 송나라 때였다. 이후 화약무기는 연이은 왕조들을 거치면서 더욱 발달하였다. 초기에는 화약이 발화를 주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폭발력이 향상되었고 화약무기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화약무기의 잠재적 위력은 곧 다른 국가들에게 알려졌다.

13세기에 몽골제국이 서아시아 정벌을 하는 과정에서 화약과 화기가 이슬람세

계에 알려졌으며, 다시 유럽은 이슬람을 통해 화약무기의 파괴력을 깨닫

게 되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화약무기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마침내

14세기 중반 영국과 프랑스가 전투를 벌이는 현장에 총포가 등장하

게 된 것이다.



★★ 악마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석가모니, 둔황 석굴 벽화(부분), 10세기.

초기에 위력이 변변치 않았던 화약무기는 놀랍게도 세계사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군사혁명(Military Revolution)’으로 이어졌다. 화약무기의 성능이 향상되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은 기사였다. 중세 군사력의 상징이었던 마상 기사는 총포 공격에 무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기사의 몰락은 중세 유럽사회의 근간이었던 봉건제가 무너짐을 의미했다. 전투력이 없는 기사를 가신으로 임명하고 봉토를 내줄 주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전쟁 때에만 동원되는 농민군은 창검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익히질 못했다. 이제는 화약무기를 다룰 줄 아는 병사들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이 최상의 군사전략이 되었다. 바야흐로 상비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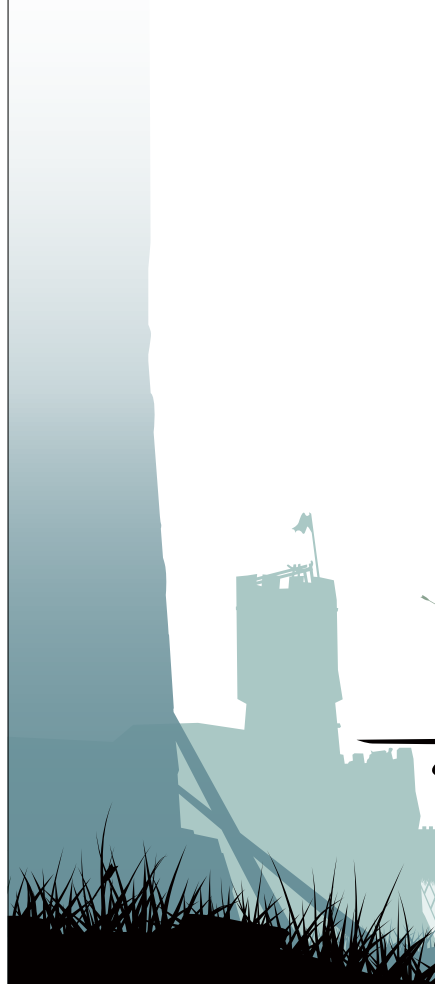
성채의 구조에도 혁명적 변화가 발생했다. 돌담을 높이 쌓은 성채는 대포 공격으로 붕괴되기 쉬웠고, 등근 능보는 아래쪽으로 바짝 접근한 적군에게 충격이 닿지 않는 사각(死角)을 허용했다. 화약무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흙벽을 비스듬한 각도로 두텁게 다져 누벽을 세우고, 능보를 뾰족하게 설계해 근접한 적군을 다른 능보에서 직선화기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새로운 요새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능보 개수만큼의 꼭짓점을 가진 별모양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성형요새(Star Fort)가 탄생했다.

군사혁명이 가져온 이런 변화들은 곧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낳았다. 돈이 부족하면 성능이 향상된 화기를 개발할 수도, 대규모의 상비군을 고용할 수도, 견고한 요새를 건설할 수도 없었다. 돈이 있어야만 군사력을 강화해 주변 세력을 흡수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재정적 능력이 곧 군사력으로 이어지는 이런 변화 속에서 대다수의 중소 영주들은 설 자리를 잃었고, 대신에 대규모 영토를 강력한 단일 권력이 통치하는 국가가 만들어졌다. 봉건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앙집권화된 근대적 국가체제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바로 군사혁명이었다.

군사혁명을 소재로 한 그림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것으로 주세페 아르침볼도(Giuseppe Archimboldo)가 제작한 「불」☆☆☆을 들 수 있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서 예술 후원자로 이름이 높았던 막시밀리안 2세에게 바친 그림이다. 그림의 각 부분은 동식물이나 사물의 모양으로 그려 있지만 거리를 두고 보면 한 인물의 모습이 되는 이른바 ‘이중 그림’이다. 전체가 부분의 합과 다르다는 뜻에서 ‘게슈탈트(Gestalt)’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불」은 세상을 구성하는 네 원소 중 하나인 ‘불’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머리는 활활 불이 붙은 장작더미이고, 이마는 촘촘하게 감긴 긴 심지이고, 턱은 촛대, 목은 양초다. 가슴에는 총과 대포가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자세히 보면 왼쪽에 신성로마제국의 상징인 머리 둘 달린 독수리 문양도 보인다. 합스부르크가의 부를 바탕으로 군사혁명을 이룬 신성로마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이 그림을 받고 막시밀리안 2세는 분명 흡족해했을 것이다.

군사혁명은 수 세기에 걸쳐 장기적 진화를 거듭했다. 14세기에는 보병의 전투력이 크게 인정 받았고, 15세기에는 포병부대가 군사력의 중핵으로 떠올랐다. 16세기에는 새 요새 건설과 소총부대의 밀집대형전술 도입이 중요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7-18세기에는 각국이 이렇게 개혁된 군대를 대규모로 확충하고자 경쟁을 벌였다. 여기에는 병참시스템을 강화하고 행정체

화약무기를 다룰 줄
아는 병사들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이
최상의 군사전략이
되었다.
바야흐로 상비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계를 완비하는 작업이 동반되었다.

군사혁명의 영향은 그야말로 범세계적이었다.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전투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 변수로 작용했다. 1453년 오스만제국 군대가 비잔틴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을 무너뜨릴 때에도, 1492년 이베리아반도에서 기독교 군대가 이슬람 최후의 보루인 그라나다를 함락시킬 때에도 개량된 화기가 큰 역할을 했다. 페르시아의 사파비 왕조와 인도의 무굴제국도 군사개혁 덕분에 각각 우즈베크 족과 델리 술탄국을 누르고 통일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도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서 빗겨나 있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1560~80년대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각각 소총부대와 야포부대를 창설해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고, 중국에서는 1630년대에 청 태종 홍타이지(皇太極)가 포병을 양성해 대륙장악의 기반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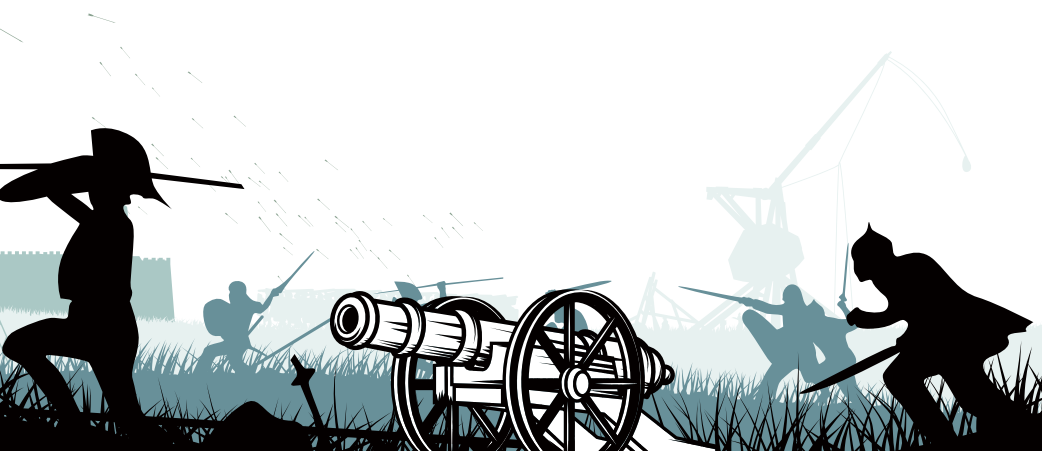
어느 국가가 강대국이 되느냐는 군사혁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군사혁명 달성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는 재정개혁에 있었다. 특히 유럽이 신항로 개척에 성공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중상주의 시대를 열자 해군력의

중요성이 급속히 커졌다. 대규모 함대에 성능 좋은 대포를 장착하고 잘 훈련된 수병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 징수를 늘리거나, 은행이나 외국 금융가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달리 말하면, 조세제도과 금융제도를 잘 갖춘 국가만이 강대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과거의 강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힘을 잃고 신흥 강자 네덜란드와 영국이 떠오르게 된 것이 바로 이 차이 때문이었다. 네덜란드는 근대적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제적 금융 중심지로 이름을 날렸고, 뒤이어 영국은 국채발행을 통해 전비를 마련하는 새로운 제도를 개발했다. 이 창의적 제도에 힘입어 네덜란드와 영국은 중상주의 시기 국제적 무력대결에서 여러 차례 승전고를 울리고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만방에 떨칠 수 있었던 것이다.



☆☆☆ 주세페 아르침볼도, 「불」, 1566년.

* 이 글은 『세계화의 풍경들』
(2017)에 실린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재정 STORY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경제시스템 붕괴가 가져오는 파장

글 이성주 『엽기조선왕조실록』 저자, 문화 칼럼니스트



조선 시대 국가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삼정(三政)이었는데 이는 토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전정(田政),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군포를 거둬들이는 군정(軍政), 그리고 춘궁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미곡을 대여해주던 환정(還政)이 바로 삼정이다. 이 삼정 시스템이 붕괴한 것이 조선 후기였다. 하나씩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첫째, 전정이다. 조선의 조세구조는 크게 토지에서 거둬들이는 전세(田稅)와 기타 잡세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였던 조선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문제는 이 전세가 문제였다. 원칙상으로는 20년마다 토지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었고, 이를 통해 토지의 소유관계나 생산성을 파악해 공평과세를 해야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것이 유명무실화된다. 생산성이 많은 땅에는 당연히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생산량이 떨어지는 땅에는 세금을 적게 거둬들이는 것이 공평과세의 핵심이지만, 이를 안 했다는 건 세수파악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게다가 은결(隱結)이라 해서 조세 대장에서 빠진 땅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이 은결의 소유주는 대부분 가진 자들이었다. 문제는 이 은결이 18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늘어만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누락된 세금만큼 가진 것 없는 자들, 즉 백성들이 세를 부담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조세를 거두던 아전들은 조세를 거둘 수 없는 땅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 명목으로 법정 세액보다 많은 조세를 거두었고, 거둬들일 수 없는 세목의 조세까지 토지에 부가하여 징수하였다.



조선 시대 국가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삼정(三政)**이었는데 이는 **토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전정(田政)**,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군포를 거둬들이는 군정(軍政)**, 그리고 **춘궁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미곡을 대여해주던 환정(還政)**이 바로 삼정이다.

田政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사극이나 각종 역사 사료에 등장하는 아전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먹는 부패관료의 전형처럼 그려지는데 이는 개인들의 성품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것이다. 조선은 가난한 나라였다. 재정상태가 극도로 허약했기에 중국에서 사신이 방문할 경우에는 그 접대비를 염출하기 위해 일반 관료들의 녹봉을 깎아야 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지방 관아의 아전들에게까지 봉급을 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아전들은 봉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활용해 알아서 자신들의 수익을 보전해야 했다.

둘째, 군정이다. 우리나라는 남자의 경우 일정 나이가 되면 징병되어 군대에서 2년간 복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선 초기에도 이런 식으로 국방을 유지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직접적인 복무 대신 군포를 내고 역에서 빠지는 방법으로 점점 변해갔다. 이 군포가 문제였다. 과도한 군포 수취가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영조 26년(1750년) 군역법이라 해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군역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군포 1필씩을 받도록 법제화된다(일부는 전세에 부가되어 1결당 쌀 2두가 부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증요법에 불과했다. 군역자원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빠지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결국 조정에서는 고을에 몇 명이 사는지도 모른 채 할당제로 지정해 군현 단위로 내야 할 군포를 정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냈다.

이 군포라도 제대로 거둬들였다면 그럭저럭 참고 넘어갔겠지만, 고을마다 합법적 면제자가 넘쳐났다. 당장 양반, 이서, 역리, 승려, 교생 등과 같이 양반이거나 특수한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군역에서 빠져나갔고, 이렇게 빠져나간 만큼 그 부담을 농민들이 져야 했다. 이렇게 되자 군역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그 부담은 점점 더 무거워져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 전가됐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백골징포(白骨徵布,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부과), 황구침정(黃口簽丁, 어린아이에게 부과), 족징(族徵, 도망자의 군포를 친척들에게 부과), 인징(隣徵, 도망자의 군포를 이웃 사람에게 대납) 등이었다.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백성들에게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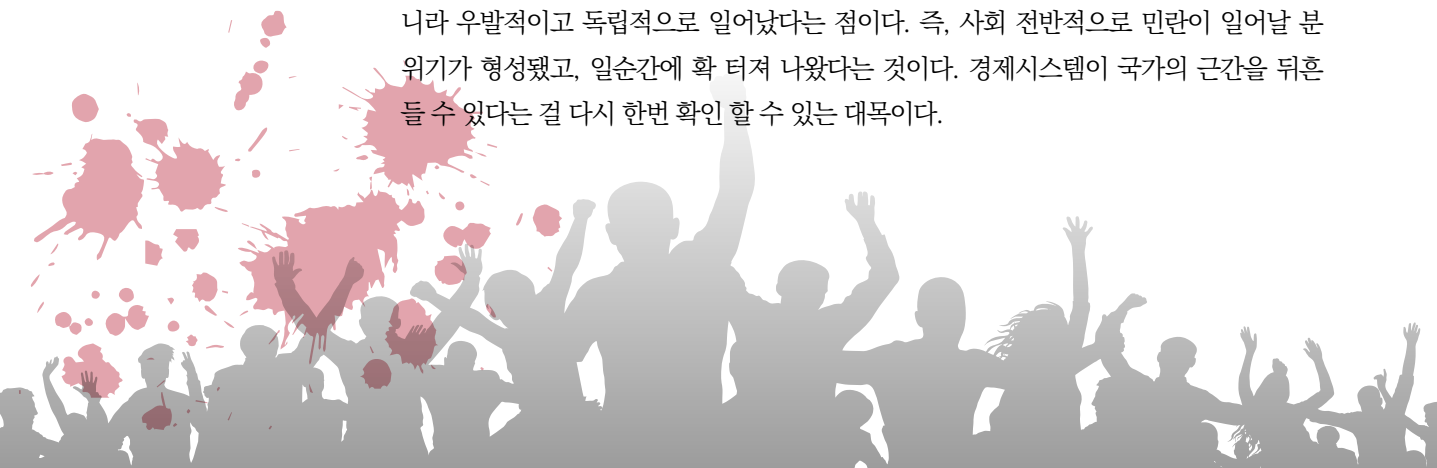
軍政

還政

셋째, 환정(還政)이다. 환정의 본래 목적은 흉년에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진휼(賑恤)이 목적이었다. 보릿고개로 불리는 춘궁기에 비축해뒀던 곡식을 분배하고 가을에 받아들이는 제도였는데 여기에 일정 부분의 이자를 받았다. 애초의 제대로 운영했어도 문제가 있는 제도였는데 6개월간 곡식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20%, 연리 40%의 고리였다. 여기에 탐관오리들의 착복과 구조적인 문제점이 결합되어 조선 후기가 되면 군량미의 교체(묵은 쌀을 소비하고, 햅쌀을 받기 위해)와 각종 기금 마련을 위해 이 환곡을 활용한다(지방 관청에서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활용했다). 이렇게 정부의 필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운영까지는 백번 양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 탐관오리들의 착취까지 이어지자 환곡은 농민 수탈의 첩병이 된다. 조선 후기가 되면 환곡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이들에게까지 억지로 환곡을 떠넘겼고, 죽은 자나 도망간 자들이 빌렸던 환곡까지 이웃에게 대납하게 했다.

철종 13년 임술년에 조선 팔도에서는 총 71차례의 민란이 일어난다. 이들을 통틀어 역사에서는 임술민란(壬戌民亂)이라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민란’이란 단어의 의미이다. 반정(反正)이나 역모는 사회지도층 내부의 권력투쟁 결과 나온 것이다. 즉, 계획되고 정교화된 권력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다 무력의 힘을 빌려 자신들의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나 민란의 경우는 다르다. 농민이나 백성들에게 권력욕이 있었을까? 자식을 창기고, 식구를 건사하는 것이 백성들의 최종 목적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정을 택하는 이들 또한 백성이다. 백성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 지켜야 할 것에 목숨을 거는 존재들이다. 그런 백성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는 건 국가의 사회구조가 극도로 허약해졌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정지됐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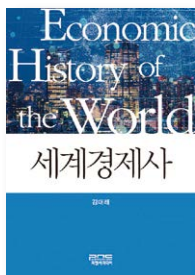
정말 무서웠던 건 일부 세력이 사전에 계획해서 전국 각지에서 봉기했다면 민란을 수습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철종과 안동 김씨 세력에게는 다행이었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진짜 공포가 등장하는데 이 71차례에 걸친 민란은 어떤 조직적인 세력에 의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민란이 일어날 분위기가 형성됐고, 일순간에 확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경제시스템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교보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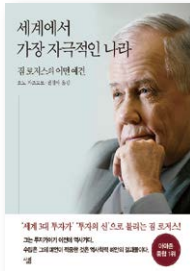


저 자 김대래
출판사 펴낸씨미디어
발간일 2019년 08월

세계경제사

인류의 기원부터 세계화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경제사의 방법론적 문제에서부터 이후의 서술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일관된 체계를 갖도록 구성된 인간의 경제생활 역사서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경제생활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기에 가능한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지역을 다루고 있으며, 인류의 경제생활이 세계적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세계적 네트워크가 인류 경제의 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측면을 서술했다. 또한 독자의 관심 제고를 위해 중간중간에 세계경제와 관련된 유익한 글들을 배치하여 경제사가 딱딱하지만 한 것이 아닌,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역사임을 맞볼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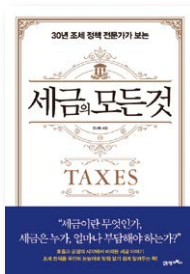


저 자 짐 로저스
 옮 김 전경아, 오노 가즈모토
 출판사 살림
 발간일 2019년 05월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로저스의 어떤 예견

이 책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잘 알려진 짐 로저스의 6년 만의 신작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돈'의 미래 지도가 어떻게 펼쳐지고 그에 따라 각국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는 책이다. 특히 역사의 흐름에 입각해서 앞날을 읽는 것이 '돈의 흐름'을 내다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이야기를 통해 들려준다. 급변하는 경제 변화에서 어떤 분야가 투자에 유망한지를 설명하고, 반세기 가까이 성공과 실패를 통해 터득한 본인의 투자 원칙과 삶의 지혜를 세세하게 밝히고 있다.



저 자 김낙희
 출판사 21세기북스
 발간일 2019년 07월

세금의 모든 것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세금은 매우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구체적인 내용에 접근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나 세금에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효율과 공평)와 주제가 있다. 이 책은 30년 조세 정책 결정에 관여해온 전문가가 세금의 역사와 의미, 가치를 되짚어보고 조세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들려준다. 세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 책이 조세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저 자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린론드
 옮 김 이창신
 출판사 김영사
 발간일 2019년 03월

팩트폴니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이 책은 사람들이 '극적인 세계관'을 선호하기에 만들어진 '사실 아닌 느낌'과 '현실 아닌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체계적 오답'에서 벗어나야만 '진짜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한다. 인간은 편견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만 머물러서는 모두가 바라는 '인간다운 삶과 세상'은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저자의 의견처럼 세계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는 독자가 아니더라도 세계가 더 나아져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공통의 출발점 '팩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PIMS) 인증 획득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히고, 8월 29일(목) 한국재정정보원 21층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PIMS 인증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이 실시하는 제도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체계적, 지속적으로 보호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PIMS 인증을 계기로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을 위해 수집하는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조금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며, “개인정보보호 의식 확산과 더불어 보안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몽골 재무부 및 국가개발청 공무원 경험전수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8월 28일(수), 몽골 재무부 및 국가개발청 공무원 12명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1명을 대상으로 dBrain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했다.

이번 경험전수는 한국어-몽골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dBrain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전수 등의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몽골 재정공무원 연수단은 8월 25일(일)부터 8월 30일(금)까지, 총 6일간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선진국의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 심층적인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dBrain 찾아가는 교육 (부산편)



한국재정정보원은 경남 지역 사용자를 위한 「dBrain 찾아가는 교육」을 8월 27일(화)~8월 30일(금) 4일간,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교육참석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의 사용자를 위한 권역별 실시 교육으로서 지난 6월 제주, 7월 광주에 이어

3번째다. 이번 교육은 교육수요가 많은 예산, 지출, 국유재산 등 7개 과목에 대하여 법·제도 및 업무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34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dBrain 찾아가는 교육」은 9월 경북권 사용자를 위하여 대구에서, 10월에는 충청권 사용자를 위하여 세종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dBrain 찾아가는 교육」 참석자의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서울에서 매달 진행하고 있는 정기교육과는 별도로, 향후 지속적으로 「dBrain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임직원 가족들도 함께 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활동



한국재정정보원은 9월 6일(금), 21층 대강당에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톡' 시상식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했다. '클린톡'이란 갑질근절·반부패·청렴 관련 SMS 문자를 임직원 업무폰으로 발송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으로, 지난 7월 임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되었다. 금일 선정된 우수작은 임직원 휴대폰으로 격주마다 발송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최학균 청렴전문강사의 공직기강 확립교육이 실시됐다. 최학균 강사는 반부패 청렴의 역사와 사례를 예시로 들며, 임직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투명한 업무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 모두 스스로 공직의식에 대한 나침반을 세우고 점검해보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기관장부터 공직자의 사명감을 늘 가슴에 품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올바른 업무수행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그 뜻을 전했다.



월간 나라재정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월간 나라재정〉을 구독하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월간 나라재정〉을 만들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기간

2019년 10월 1일(화)~11월 10일(일)

당첨자 발표

당첨자 개별 문자 발송(11월 중)

설문조사 참여방법

QR코드 또는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 후 참여



<http://naver.me/5HNrj6Lu>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분을 추첨하여
따뜻한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애 독 자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QUIZ



아래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문 제

국가예산 편성 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도입·운영중인 제도명은?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2019. 09. 27. ~ 2019. 10. 18.

POSTCARD



8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
열린재정

☆ 상품 당첨자 ☆

poh*****@naver.com
yjc*****@yahoo.co.kr
cho*****@naver.com
bjc*****@naver.com
dra*****@naver.com
ewq*****@naver.com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쿠폰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기사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동안 사실 조선 등 과거 옛 선조들의 경제 철학은

지금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한 명의 경제 관료를 소중히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견해와 별개로 그들의 경제 정책에

편견 없이 귀 기울이는 모습에 깜짝 놀랐네요.

이러한 선조들의 모습이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cho*****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